

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金大中(キム・デジュン)・小渕宣言19周年記念国際学術会議

한일파트너십 선언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 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 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

-
- 일시 2017년 9월 21일 (목) 13:00-18:00
 - 장소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민주연구원, (사)한일미래포럼
 - 언어 한일 동시통역
-
- 日時 2017年9月21日 (木) 13:00-18:00
 - 場所 金大中図書館国際会議場(ソウル市麻浦区東橋洞)
 - 主催 延世大学金大中図書館、(社)韓日未来フォーラム、民主研究院
 - 言語 日韓同時通訳

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일파트너십 선언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

1998년 김대중-오부치간 한일파트너십 선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부와 국민은 1998년 10월을 계기로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상호존중과 공동협력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와 영토문제로 인하여 양국 정부와 국민은 긴장과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와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한국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출발한 민주와 평화정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간 협력과 연대를 만들어냄으로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의 공공재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한일관계 구축은 한국외교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시점에서 갈등사안을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 공공재이며, 동아시아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안정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를 둘러싼 각국의 엇갈린 시각 등,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안요인을 극복하면서 한국외교의 리더십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제19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의 외교 전문가와 언론인이 모여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미래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실줄 아오나,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규호 (사)한일미래포럼 대표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 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

1998年、当時、韓国の金大中大統領と日本の小渕恵三首相の間で取り交わされた「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は、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礎を築く上で歴史の大きな転換点となりました。日韓両国の政府と国民はこれを機に、歴史を直視し未来に向けた相互尊重と連携協力に合意しま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20年が経った今日、両国の政府と国民は歴史認識や領土問題を巡る緊張と対立を未だに解消できずにいます。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北東アジアにおける平和と安定を願う韓国国民の支持を得てスタートしたいわば「民主と平和を目指す政府」と言えます。多数の国民に支持される文政権は、自ら進んで市場経済と民主主義の価値を共有する日韓両国間の協力と連携関係を築き上げることで、北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平和と安定に不可欠な“公共財”として発展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和解と協力に向けた日韓関係の構築は、韓国外交の基盤となるのはもとより、未来志向の視点に立って、両国間に横たわる問題を解決していくための“外交的公共財”であり、ひいては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平和と繁栄の重要な“安定装置”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るといえると思います。

北朝鮮の核実験とミサイル発射、THAAD（高高度迎撃ミサイルシステム）の韓国配備を巡る各国の利害関係など、北東アジアの国際政治における懸念材料を乗り越え、韓国外交のリーダーシップを取り戻すための方策は何なのか。「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から今年で19年を迎え、日韓両国の外交専門家とメディア関係者が一堂に会し、未来志向の日韓関係のあり方や政策の方向性について意見交換を行い、そのビジョンをと示すきっかけになればと思います。

つきましては、ご多忙のご折誠に恐縮に存じますが、是非ともご参加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チュ・ギョホ（社）韓日未来フォーラム代表・元駐英国大使
パク・ミョンリム 延世大学金大中図書館長
キム・ミンソク 民主研究院長

12:30-13:00 등 록

13:00-13:20 개회식

개회사: **추규호** (사)한일미래포럼 대표 · 전 주영국 대사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13:30-14:20 기조 강연

사 회: **추규호** (사)한일미래포럼 대표

발 표: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 전 주일 한국대사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질의 응답

14:30-16:00 제1세션

“역사영토 갈등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

사 회: **김상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 표: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

토 론: **이호철** 인천대 교수 ·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미네기시 히로시 닛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 (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

16:00-16:30 BREAK

16:30-18:00 제2세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의 모색”

사 회: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발 표: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토 론: **요네무라 코이치**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구라타 히데야 방위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안보협력센터 소장

12:30-13:00 受 付

13:00-13:20 開会式

開会挨拶：チュ・ギョホ (社)韓日未来フォーラム代表・元駐英国大使
パク・ミョンリム 延世大学金大中図書館長
キム・ミンソク 民主研究院長

13:30-14:20 基調講演

司 会：チュ・ギョホ (社)韓日未来フォーラム代表
発 表：チェ・サンヨン 高麗大学名誉教授・元駐日韓国大使
「21世紀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立ち返ろう」

質疑応答

14:30-16:00 第1セッション

歴史・領土問題を巡る対立と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

司 会：キム・サンジュン 延世大学政治外交学科教授
発 表：木宮正史 東京大学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所長
討 論：イ・ホチョル 仁川大学教授・元韓国国際政治学会会長
峯岸博 日本経済新聞ソウル支局長
ヤン・ギホ 聖公会大学教授・(社)韓日未来フォーラム運営委員長

16:00-16:30 休 憩

16:30-18:00 第2セッション

北東アジアの平和に向けた日韓間の協力の模索

司 会：キム・チャンス コリア研究院院長
発 表：チョ・ヤンヒョン 国立外交院教授
討 論：米村耕一 毎日新聞ソウル支局長
倉田秀也 防衛大学国際関係学科教授
ファン・ジェホ 韓国外国語大学グローバル安保協力センター所長

기조 강연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3
발 표: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전 주일 한국대사	
제1세션	
역사영토 갈등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	9
발 표: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소장	
토 론: 이호철 인천대 교수·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29
미네기시 히로시 닛케이신문 서울지국장	31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	33
제2세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의 모색	37
발 표: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토 론: 요네무라 코이치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51
구라타 히데야 방위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55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안보협력센터 소장	61
基調講演	
「21世紀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立ち返ろう」	65
発 表: チェ・サンヨン 高麗大学名誉教授・元駐日韓国大使	
第1セッション	
歴史・領土問題を巡る対立と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	73
発 表: 木宮正史 東京大学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所長	
討 論: イ・호철 仁川大学教授・元韓国国際政治学会会長	91
峯岸博 日本経済新聞ソウル支局長	93
얀·기호 聖公会大学教授・(社)韓日未来フォーラム運営委員長	95
第2セッション	
北東アジアの平和に向けた日韓間の協力の模索	99
발 표: チョ·얀ヒョン 国立外交院教授	
討 論: 米村耕一 毎日新聞ソウル支局長	113
倉田秀也 防衛大学国際関係学科教授	117
ファン·ジェ호 韓国外語大学グローバル安保協力センター所長	123

김대중-오부치 선언 1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한일파트너십 선언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



기조강연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으로 돌아가자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전 주일 한국대사)

현재의 한중일관계

한일관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일본, 중국, 한국은 근현대사 속에서 세계를 향해 커다란 메시지를 전해 왔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은 서양이 아닌 이곳 아시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한 대국이다. 중국은 인류역사상 적어도 2500년에 걸쳐 세계의 중심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리고 1978년 이후부터 일관되게 개혁개방을 추진해 왔다. 지금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공사례로 누구나가 높이 평가하는 대국이다.

한국은 전후 가난한 나라로 출발했다. 하지만 열심히 근대화해 매진한 결과 산업화도 이룩하고 민주화도 달성했으며 또한 정보화도 높은 수준이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시아에서 최초로 아래로부터의 변혁 운동,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피 흘리며 민주화를 쟁취한 나라이다. 그 점에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매력적인 세 나라가 협력을 하게 된다면 세계를 향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공헌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만약 중국, 일본, 한국이 EU와 같은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가까운 협력체를 만든다면 서양, 특히 미국은 내심 존경하지 않을까 싶다.

백영서 교수는 ‘동아시아의 분단구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만약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분단이 고착화되어 버린다면 이는 ‘자가분단’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분단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한중일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협력을 하여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역설해 두고 싶다.

안중근이 30대 때 사형집행 전에 쓴 책이 그의 정치적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동양평화론’이다. 간결한 내용이지만 최초의 한중일 3국 평화론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중일 관계에서 평화를 논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안중근의 발상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다.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한중일이 공동군대를 창설한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다. 지금의 3국 관계를 보면 꿈 같은 이야기다.

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부흥의 꿈’,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구상’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 지도자의 발상에서 한중일 3국의 평화협력에 대한 절실한 마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의 한중일 3국은 전세계 인구의 23%, GDP는 20% 이상, 외환보유액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1주일에 2000편 이상의 비행기가 오가고 있고 1년에 1700만명의 사람이 왕래하고 있다. 상호간 왕래 규모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얼마든지 공동체가 탄생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이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한중일 3국에 제안한다

건전하고 안정된 3국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2015년에는 한중일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해야 한다 (이는 2015년말에 서울에서 실현되었다: 편집자 주). 이는 한국정부의 의무로 원래는 2013년에 개최해야

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2014년에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연기가 되었는데 2015년에도 실현되지 못한다면 걸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두번째로 정치, 군사, 안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경우에도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 한중일 3국의 아티스트들에 의한 상설오케스트라, 즉 베이징, 서울, 도쿄의 머리글자를 딴 가칭 BeSeTo 오케스트라의 창설을 나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안해 왔다. 이것이 나의 꿈이기도 하다. 수많은 일본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전직 총리까지도 이에 찬성하였다. 한국도 찬성한 상태이다. 중국의 지도자도 찬성해주리라 확신하고 있다.

2014년 12월17일, 한국국회의장의 중국방문단 고문으로 시진핑 주석을 예방하는데 동행한 바 있다. 그 때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일 3국에는 아티스트들이 매우 풍부하다'고 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풍부한 나라가 일본이다. 한국도 그 수는 적지만 퀄리티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있다. 중국도 훌륭하다. 13억 인구의 열기에 힘입어 젊은 천재적 지휘자가 배출되었다. 이 같은 점에서 한중일 3국의 풍부한 예술적 자원을 활용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다. 즉각 실현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예술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연을 도쿄돔, 천안문광장, 서울광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개최하게 되면 한중일 세 나라 국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오래 전에 중국과 미국이 핑퐁외교를 성공시킨 바 있다. 한중일 3국의 예술적 힘 즉 소프트파워를 통해서 3개국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세번째로 학술적 교류의 문제이다. 한중일 3국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 같은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상, 보편적인 철학을 탐구하는 작업이 학계의 사명이다. 그 중 일례로서 17세기 중국의 황종의(黃宗義), 18세기 조선의 박지원, 19세기 일본의 요코이 쇼난(横井小楠)은 당시의 보편적인 지식체계였던 유교를 수용하면서도 주체적으로 서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위대한 퍼블릭필로소퍼 (공공철학자)인 셈이다. 이처럼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을 공동연구하여 공동발표하게 되면 상호간의 사상적 이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로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관련된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역시나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나는 한일관계가 뼈저릴 때마다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 공동 서명한 ‘한일파트너십선언’을 읽어보곤 한다.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바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일본과 한국 모두 현 정권은 이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 ‘공동선언’은 훌륭한 자산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김대중-오부치에 의한 ‘한일공동선언’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아 열리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다. 한일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옛날이나 지금은 물론이며 미래에도 두 나라 사이에는 다양한 쟁점이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의 1억2000만명, 그리고 남북한의 7000만명 인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965년 한일수교 이래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던 오부치-김대중 간의 ‘한일공동선언’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관계구축을 꾀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공동선언은 ‘무라야마 담화’에 기점을 두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씨의 역사관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의 역대 자민당 총리는 무라야마씨의 역사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그 이후의 자민당정권, 오부치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의 한일파트너십정신을 왜 계승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이 같은 비판은 한국정부에도 해당이 된다.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은 김대중정권의 최대 성과이다. 내가 주일대사로 있는 동안 처음1년은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로 양국관계는 최악으로 질주하며 나는 사실상 소환명령을 받아 10일간 한국으로 귀국한 바 있다. 그러나 후반 1년 간은 그야말로 이 한일파트너십의 실천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일본의 교과서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자세는 상당히 엄격했는데 문제가 된 '새로운 교과서'의 채택률이 0.039%에 불과했다. 나는 그 같은 결과를 보면서 일본 국민의 판단에 대한 나의 신뢰는 더욱 확고해졌다. 가끔 이 이야기를 한국의 교단에서도 할 때가 있다.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라야마 담화를 구체화시킨 점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식민지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죄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무라야마 담화는 상당히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해준 것이다.

이어서 오부치 총리의 솔직한 역사관에 대해 김대중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로서의 화해'를 결단한 것이다. '사죄와 화해' 그리고 '화합'이다. 화해의 일례로 잘 아시다시피 '문화개방'이 있었다. '문화개방'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한일간의 역사 속에서 문화개방이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 당시 한국인은 85%가 '문화개방'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그 때의 일화를 하나 들어보자면 나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최상용교수, 문화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찬성'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 어째서 찬성이냐?"라고 물었고 나는 "문화교류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상호 학습의 과정으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옛날 고대 때 일본에 대해 문화를 전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문화는 우수합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경쟁력 있는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배우면 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답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정치인이기에 또 다른 요소도 판단기준에 넣어야 한다. 만약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그런 결정은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에서 85% 이상이 '문화개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선거 직전의 정치인은 포퓰리스트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선거는 당분간 예정에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은 역사 조항과 문화 조항 두 가지 모두 한일 쌍방에게 상당히 플러스로 작용했다. 과거,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역사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이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무조건 양국 관계자들끼리 만나야 한다. 정상들이 2년 반 동안이나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대화를 풀어 나간다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는 것이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사려 깊음의 자세

마지막으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국가를 망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역사를 되돌아 봐도 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를 망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역사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가급적 일본어에서 말하는 ‘현려(賢慮, 역주; 현명한 생각)’와 사려 깊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절제된 언어와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1 세션 발표문

한일관계의 ‘잃어버린 19년’을 돌아보며: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과 그 후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학)

들어가며

1.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란 무엇이었던가?
2.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성립과 그 조건
3.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그 이후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4.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대한 또 하나의 대응전략

마치며

들어가며

1998년10월8일,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으며 이는 TV로 중계되었다. 그 연설을 듣고 필자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하게 실감하였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독자적인 근대화에 성공하여 서구문물을 수용하면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은 제국주의

와 전쟁의 길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일본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바뀌었습니다. 일본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 해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세계 제2위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이정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최대의 경제원조국으로서 자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폭피해를 몸소 경험한 일본국민들은 항시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비핵평화주의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 이전의 일본과 전쟁 이후의 일본은 실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전후 일본국민과 지도자들이 쏟아온 피땀 어린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¹⁾.”

이상과 같이 전전(戰前) 일본과 구별하여 전후(戰後) 일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연설은 지금껏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전전 일본과의 연속성으로 전후의 일본을 바라보던 대일연속사관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는 지금도 일본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스스로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겸허히 반성하는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과 불신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아시아 각국을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저는 과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반성하는 도덕적으로 용기 있는 수

1) 1998년10월8일김대중대통령의 일본국회연설 일본어역에 관해서는 민단(대한민국거류민단)웹사이트 (http://www.mindan.org/shinbun/981014/topic/topic_e.htm)를 참조바람.

많은 일본의 민주시민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전전과 전후를 연속적으로 이해하고 그 결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항시 경계하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인식은 적어도 일본사회에는 확실히 ‘신선했’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예감은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 배신당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998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는 그 이후 우여곡절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1998년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당시의 양호했던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19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1998년에 절정을 이룬 한일관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 한일관계에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없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성립시킨 조건의 변화와 관련 지어서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한일관계가 더이상 발전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인지, 향후 쌍방의 전략까지 포함시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지적(知的) 작업을 통해 19년의 시간이 경과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그저 ‘역사의 일화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적 의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1.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란 무엇이었던가?

1998년10월8일,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더불어 발표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어떠한 점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예감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가장 중요한 점은 한일관계를 좁은 의미에서의 한일‘간’ 관계뿐만 아니라 제삼자 및 국제사회로 향하는 ‘한일’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발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문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제4항에는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로운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²⁾라는 구절이 있다. 게다가 제6항에도 ‘냉전 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제9항이다.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일 환경정책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분야에서의 양국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약 및 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듯이 지구환경, 개도국원조, 범죄방지 등 글로벌문제에 관한 한일간 협력의 중요성을 상호간에 인식을 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와 같은 글로벌문제들에 관한 한일협력 이외에도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대한 대응, 외환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대한 한일경제협력 등 한일 간의 현안에 관한 언급이 있으며 한일이 공유하는 역사에 관한 언급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사안들에 더하여 새롭게 한일이 협력하여 글로벌문제들에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³⁾. 다만 그와 같은 새로운 한일관계는 역시나 한일 간에 가로 놓인 현안들이 상당부분 해결되던가 아니면 봉인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법이며 글로벌문제들에 대한 대응 그 자체가 그와 같은 현안의 해결과 봉인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2) 1998년10월8일에 발표된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의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외무성웹사이트 (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를 참조바람.

3) 기미야 다다시 「제4장 김대중정권에 의한 대북포용정책의 기원●전개●귀결」 이가라시 다케시 편 『태평양세계의 국제관계(변모하는 미래평양세계Ⅱ)』 사이류사, 2005년, pp. 169-205를 참조바람.

2.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성립과 그 조건

그렇다면 왜 하필 1998년이라는 시점에서 그와 같은 한일관계를 새롭게 구분 짓는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이 성립된 것일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고 또 납치사건 등을 통해 일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대중대통령이라는 정치지도자의 존재를 빼놓고는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에 대해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929년 태생으로 일본어를 잘 이해하는 세대이다. 게다가 한국외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중요성이 박정희정권에 대항하는 야당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는 한일수교에 관한 박정희정권의 자세를 비판하면서도 한일수교를 통한 한일경제협력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1971년 대선 때의 공약 중 하나인 '4대국보장론'은 그 이전까지 한국 내에서 '금기시'되어온 한반도의 안전보장에 관한 일본의 역할 및 관여까지 언급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⁴⁾.

그리고 무엇보다 1971년 대선 패배 이후 유신체제 하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에 일본으로 '망명'하여 한창 반정부활동을 펼치던 1973년 8월에 체류지인 도쿄 그랜드팔레스 호텔에서 한국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어 한국으로 '송환'되는 이른바 김대중납치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듬해인 1974년 8월 재일동포 문세광에 의한 대통령저격사건과 함께 한일정부 간에 소위 '정치결착'이 이루어졌다⁵⁾.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은 한국민주화의 상징으로 일본사회에 인식되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정치결착'을 비판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한일연대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⁶⁾. 게다가 1980년 전두환 등의 신군부세력에 의해 '내란선동'죄에 처해져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일본에서는 김대중에 대한 구명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졌었다⁷⁾.

이처럼 김대중에게 일본정부는 한편으로는 박정희정권과 결탁하여 자신에 대한 납치사건의 법적책임을 호지부지 덮어버린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4) 기미야 다다시 「젊은 김대중의 외교구상」 이종원, 기미야 다다시, 이소자키 노리요, 아사바 유키 『전후한 일관계사』 유리카쿠, 2017년, pp. 130-131.

5) 김은경 「냉전 변용기의 한일관계의 전개: 김대중 납치사건과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7호, 2010년, pp.148-182.

6) 아오치 신, 와다 하루키 편 『한일연대의 사상과 행동』 현대평론사, 1977년.

7)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생각하는 일본인모임 편 『김대중을 죽이지 마라!』 반세이사, 1980년.

일본국내에 자신을 돕기 위해 구명운동을 펼쳐준 사람도 상당수 존재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같은 양면성을 지닌 대상이었다. ‘저는 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일본국민과 언론 그리고 일본정부의 은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되어 저의 오랜 숙원을 이룬 것만 같아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한 국회연설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나 있다.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도 다나카(가쿠에이)파의 계보를 잇는 정치인으로, 그 이전의 비자민당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일본신당)와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정권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사회당)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그 이후의 후쿠다(다케오)파의 계보를 잇는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라고 하는 청화회(淸和會-역주: 자민당의 파벌) 주도의 정권과 비교하면 역사인식 문제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녔다⁸⁾. 이같은 한일 정치지도자들의 개성이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라고 하는 역사문제에 관한 한일간의 ‘공감’으로 귀결시켰다.

하지만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간의 정치적 개성이라는 우연적인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한국과 일본 각각의 필요성이 개재되어 있다.

첫번째로 외환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의 경제협력이 필수였다는 한국측의 사정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 투자, 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경제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8) 다만, 후쿠다 다케오 자신은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녔다. 이 점에 관해서는 후쿠다의 회고록을 참조바람. 후쿠다 다케오 『회상구십년』 이와나미서점, 1995년.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국 융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였다⁹⁾라는 합의에 잘 반영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일본측의 입장에서 보면 때마침 1998년 8월에 북한이 실험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에 커다란 충격을 받아 그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개발이라는 안보상 위기에 대해 김대중정권과 협력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닌 지도자의 존재와 각각의 상호협력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한일간 협력의 필요조건은 될지 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한일간 협력의 제도화의 배경에는 냉전기 및 탈냉전기에 진행된 한일관계의 아래와 같은 구조적 변용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4가지 구조적 변용이 작용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⁹⁾.

첫번째로 한일간 수평화이다. 1965년 한일수교이후의 한일간 협력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ODA 등의 개발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성격의 것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가 전제로 여겨졌다. 그러한 정책이 주효하여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해 한국경제의 규모 및 수준이 점차 일본에 버금갈 만큼에 이르게 되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모되어 간 것이다. 80년대까지는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등에 기인하여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들이 한일 사이를 넘나들며 적잖이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¹⁰⁾, 90년대 이후 이와 같은 견해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일본이 90년대 이후 잦은 정권교체 등으로 그 경제력에 비해서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한데 반해 한국은 대통령제 하에서 게다가 김대중이라는 세계적인 존재감을 지닌 지도자 아래에서 국력 이상의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처럼 외교력에 있어서는 한국

9) 이러한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바람. 기미야 다다시 「서론 구조적 변용을 통해 표류하는 한일관계」 기미야 다다시, 이원덕 편 『한일관계사1965-2015 I 정치』 도쿄대학출판회, 2015년, pp.1-11. 기미야 다다시 「기로에 선 한일관계: 마찰을 넘어 '진화'를 향해」 『일본공간』 12호, 2012년, pp.87-100.

10) 일본측의 이와 같은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 스미야 미키오의 『한국의 경제』 이와나미 신서, 1976년.

이 일본보다 나으면 나왔지 결코 뒤처지지 않는 파워를 지니게 되었다.

두번째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정치경제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한일정치체제의 균질화이다.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제3항의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라는 문언에 그와 같은 상호 인식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었다.

세번째로 정치경제중심, 정부간 재계간 관계 주도의 한일관계에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 관계 등도 포함시킨 다층적 관계라고 하는 변용이다. 한일간의 활발한 문화교류, 문화의 상호침투라고 하는 현상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었는데 때마침 김대중정권이 추진한 대일문화개방정책은 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었다. 대일문화개방정책은 종전의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일본문화의 한국침투를 공식화시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류’라고 하는 한국문화의 일본침투를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의 문화적 ‘보호주의’를 버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또 냉전기의 한국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일본 시민사회와의 교류는 한국사회가 기피해야 할 ‘좌익사상’이 한국사회를 오염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금지되었는데 탈냉전기에 한국이 민주화를 이룸으로써 한일 시민사회간 교류는 여러 영역과 차원에서 상당히 활발해졌다¹¹⁾.

이 또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제4항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관계를 정치, 안전보장, 경제 및 인적 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라는 구절에는 관계

11) 기미야 다다시 「한일시민사회의 관계 구축을 위한 조건」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 인식』 나남, 1997년, pp.229-264.

의 다양화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제10항에서는 ‘양국 정상은 이상의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로 한일관계의 다층화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네번째로 한일관계의 쌍방양화이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심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따라서 가치, 정보 등이 항상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던 상황이 쌍방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균형화됨으로써 가치 및 정보 등의 흐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한국에서 일본으로도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쌍방향화라고 하는 구조적 변용이 점차 정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일본보다는 한국 쪽이 더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대통령의 방일과 함께 이루어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 관해서는 한국 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본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4가지 측면에서의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은 종합해보면 ‘비대칭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한일관계를 ‘대칭적이고 상호협력적인’ 한일관계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했다¹²⁾. 그것이 1998년 시점에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단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3.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그 이후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하지만 1998년 이후의 한일관계는 이러한 새로운 한일관계가 정착되어 제도화되는 데 성공했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림1은 일본내각부가 실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가운데 한일관계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낸 것이다. 1998년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 및 한일관계의 양호도(良好度)에 관한 인식에서 반드시 최고정점이었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12) 기미야 다다시「제11장 한일관계:비대칭적 상호보완에서 대칭적 경합으로」 오무네 사토시, 오니시 유타가 편저 『FTA, TPP의 정치적 무역자유화와 안전보장 및 사회보장』 유키카쿠, 2016년, pp.251-271.

호감도가 증대되었던 것에 반해 1998년 이후에는 현실 속 한일관계의 양호도에 관한 인식 추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의 증감폭이 커지게 되었고 특히 2012년 이후에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 한일관계의 양호도 인식 모두에서 그 수치가 격감되었다.

한국의 여론조사는 이와 같은 연도 별 조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는 원래 대일호감도가 일본의 그것에 비해 높지는 않아서 증감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나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이 가져다 준 임팩트는 일본내에서의 평가만큼 한국에서는 높지는 않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대일본관에는 엄격한 측면이 있기에 일회성 사건 등으로 인하여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일간에 있어도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의 임팩트는 그다지 지속성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한 한국사회의 엄격한 대일본관을 전제로 놓고 보면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이 갖는 임팩트가 한정적이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 지나치게 획기적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1998년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 정점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계속 지속된 이유가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 성립시킨 조건들이 변했기 때문인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와 같은 조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이 성립된 것인데 그러한 조건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약화되었기 때문에 양호한 한일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1998년 이후 대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무렵부터 한일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김대중정권에서 노무현정권으로의 교체, 일본에서의 고이즈미정권, 아베정권의 등장이라는 정권의 책임자, 정치지도자의 교체가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었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과 마찬가지로 ‘진보’정권이기는 했으나 일본을 잘 알고 있었던 김대중대통령과는 달리 노무현정권 내에는 일본과의 연결고리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욕은 있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다고 해야하나, 외교적으로 서툴렀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오부치정권 이후 같은 자민당정권인 모리,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아소 정권으로 이어졌었는데 특히 아베정권 이후는 1년 정도에 불과한 단명 내각이었다. 게다가 적어도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오부치정권만큼 진보적이지 않았다. 이처럼 공동선언 이후의 한일관계는 이를 유지하고 지탱해줄 강력한 의지와 정치력을 지닌

정치지도자 및 정권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시 공화당정권의 등장과 클린턴정권과는 다른 대북강경론의 대두가 북한의 핵개발이 드러남으로 인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일간 공조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2002년, 2004년 두 번에 걸친 북한방문을 통해 북일간 수교에 대한 의욕을 보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과 대북정책에 관한 공조 및 협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령 고이즈미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었다. 하지만 일본의 대북정책이 고이즈미의 1차 방북 시에 드러나게 된 일본인납치문제로 인하여 강경론이 대두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북일관계는 정체 및 악화되었다. 한국의 노무현정권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일간 협력에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등으로 기인한 역사문제가 부각됨과 동시에 한일간에 상시적으로 존재해온 영토문제를 역사문제와 연관지음으로써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일강경론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¹³⁾.

또한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간 협력에 관해서도 김대중 정권 하에서 신속히 위기를 벗어나는 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경제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대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도 노무현 정권으로 하여금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일강경론으로의 급선회를 더욱 촉진시킨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보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성립시킨 조건은 일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도자들의 교체와 북한문제 및 한국내 경제문제와 같은 상황들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저하시키거나 어렵게 만들게 됨으로써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자체가 한일관계를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든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구조 자체가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성립시키는 조건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면 이를 정점으로 그 이후의 한일관계가 악화된 사실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과는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말인가? 과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13) 기미야 다다시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일관계」 『일본공간』 창간호, 2007년, pp.162-185.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이 그 당연한 귀결로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의 한일관계 악화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과 전혀 무관했던 것도 아니다. 구조적 변용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귀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로 수평화에 대한 대응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힘의 이동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화를 함께 수용함으로써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이행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반면에 그러한 힘의 이동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적 강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는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 약자는 그것에 편승함으로써 한층 더 자기주장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수평화가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호 경쟁관계, 즉 자기주장만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의 한일관계를 살펴 보면 수직적인 한일관계의 수평화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방향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전의 수직적 관계 하에서는 약자인 한국이 강자인 일본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도 있었으며 또 일본은 한국과의 경쟁의식보다는 냉전체제 하의 남북분단체제 하에서 한국 우위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왔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한 한일간의 비대칭성이 한일간의 상호보완관계를 성립시켜 왔었다. 하지만 수평화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이 싹트면서 언제까지나 한국의 주장에 관용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다는 의식이 강해지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진국’다운 세련되고 절도 있는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게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의 반일감정은 여전하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한국은 과거의 수직적 관계 하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가치관에 입각한 한국의 주장을 충분히 관철할 수 없었지만 관계가 수평화됨에 따라서 그러한 주장을 더욱 완전한 형태로 관철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이 강해진다. 게다가 그러한 한국의 주장에 대해 종전에는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오던 일본이 이상하게도 관용적이지 않은 자세로 전환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됨으로

써 아무래도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상대(일본)의 대응이 바뀐 것'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법이다. 결과적으로 한일은 대칭적 관계 하에서 상호경쟁의식을 한층 더 격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균질화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주화에 수반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한일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러한 가치관의 해석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둘러싼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어느 쪽인가 하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결정에 이르는 절차라는 인식이 강하여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실질적인 가치가 실현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간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규범이 당연시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그러한 결정에 이르는 절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결정의 결과, 즉 어떠한 실질적인 가치가 실현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를 들어 1987년의 민주화나 2017년의 박근혜대통령 탄핵과정 등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정의에 위배되는 약속은 뒤집어져야 하며 정의가 구현된 새로운 약속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간에 지금도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보상, 구체적으로는 위안부문제와 징용공문제 등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한 보완적 조치는 가능하나 어찌되었건 간에 그러한 법적인 입장을 뒤 흔드는 것은 '법의 지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 및 사회에서는 애초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그 자체가 수직적이며 비대칭적인 한일관계 하에서 '합의'되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어 '정의'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원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에 설령 일단 체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비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간의 차이는 '법'과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래라면 마땅히 공유되어야 할 가치관에 대한 상호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측에서 보면 '진정 한국과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비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며 한국 측에서 보면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역사관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가치관을 달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낳게 된다. 그 결과 기본적인 가치관의 공유 그 자체에 대해 상호 간에 의문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세번째로 다양화 및 다층화에 대한 대응이다.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다양화 및 다층화된 한일관계를 정부가 주도해 통합하는 형태로 성립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화 및 다층화된 관계를 정부주도로 통합해 타협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한일FTA협상에서도 결국 정부가 각각의 사회가 얻게 될 제반 이익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실패하여 체결로 이끌고 가지 못한 것이다. 또 위안부문제의 경우도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과 2015년말 정부간 위안부합의가 한일 쌍방의 사회, 특히 해당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거부세력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다양화 및 다층화된 관계 속에서 타협을 도출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네번째로 쌍방향화에 대한 대응이다. 냉전기의 한일관계를 보면 한국의 관심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한일간의 대립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 일본에서는 그것이 외교문제화되지 않고 정부 재량에 의해 타협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한일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관심과 정보 면에서의 비대칭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로 인해 정부주도의 타협은 한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민심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되어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과의 현안문제에 대해 타협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대응에 있어서도 이제는 일본 사회도 무관심할 수만은 없게 되어 한국의 대응에 관대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한국의 대응에 더욱 대항하는 강경론이 여론 안에서도 형성되게 된다.

그만큼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일본사회의 민감성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호 민감성을 전제로 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사회의 반대의견을 억누르고 타협을 도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게다가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와 같은 쌍방향화 속에서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한일 양쪽이 모두 갖게 되기 때문이다. 탈냉

전기 속에서 위안부문제와 역사문제라고 하는 한일간에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문제들이 왜 그로부터 사반세기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침예화되고 있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쌍방향화된 한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4.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대한 또 하나의 대응전략

이와 같은 한일관계는 구조적 변용의 당연한 귀결인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지 당연한 귀결은 아닌 것이다. 그러한 구조적 변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전제로 어떠한 선택지를 설정하며 또 그와 같은 선택지 속에서 그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번째로 수평화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호 주장만을 강화하지 않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서로 간의 주장을 강화하여 경쟁을 격화시키기만 한다면 그 결과,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은 제로섬이 되어 버릴 뿐이며 게다가 절대이익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크지도 않다. 상호 간에 경쟁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경쟁상대보다 자신이 얼마만큼 더 많은 이득을 얻느냐 하는 상대적이익 쪽으로 의식이 쏠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득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특히 제삼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그리 현명한 선택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삼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 일본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간의 절대이익을 증대시키는 선택을 하는 편이 더 현명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다. 특히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 불투명한 트럼프정권을 떠안고 있는 동맹국 미국과의 동맹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핵미사일개발에 매진하여 군사적 도발을 강화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다면 한일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문재인정권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의 '좌파'정권이라고 하는, 실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경계가 담긴 우려가 정권출범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정권의 외교정책에는 그와 같은 것들은 엿보이지 않고 설령 위안부문제와 역사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삼국간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베정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한일 모두 북한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협조적 자세를 견지한다. 그러한 발상은 설령 한일관계가 수평화되어 경쟁의식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견지해야 할 자세이다.

두번째로 균질화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도 공통된 가치관에 대한 자신의 해석만을 절대화하여 상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만 더 상대의 해석을 이해한 다음에 그 괴리를 좁혀나가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확실히 한일 간의 괴리만 놓고 보면 양국 간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제삼자를 염두에 두고 한일간의 거리감을 의식했을 때 오히려 한일간의 균질성이 한층 더 강하게 의식될 것이다. 중국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달리 하는 강대국을 염두에 둔다면 분명 한일 양국은 가치관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나 공통성이 강조될 것이다.

한국내에서는 중일과의 거리감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가깝다는 의식이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한중과의 거리감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한중만을 놓고 보면 중국보다 한국 쪽이 더 가깝다고 느끼는 일본에 반해 한국에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중국 쪽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이 같은 경향은 그리 고정적인 것은 아닐 터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관은 지난 1년여 동안 사드배치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 등으로 인해 상당히 유동적이며 한국사회의 대일본관에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비교만 놓고 보았을 때 한국사회의 대일본관은 상대적으로 가변적이다. 공통된 가치관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간의 괴리는 좁힐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위안부문제와 징용공 문제 등에 관한 한일간의 괴리로 봤을 때에도 한국은 ‘일단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특하면 골대를 옮기려 한다’면서 한국을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일본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단지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오래된 약속은 파기되

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것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시 말해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를 중시하는 자세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해질 터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논리만 옳바르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 논리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조정하여 양립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한일정부간 합의도 그와 같은 시도의 일환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한국내에서는 정치상황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를 한국 국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해서도 이를 파기하고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한일관계를 둘러싼 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작업에 실질적으로 힘써오지 않았던가. 그와 같은 작업을 거치게 됨으로써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¹⁴⁾. 지금까지는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불가능해지게 된 특별한 사정은 없을 터이다. 한일관계의 쌍방향화로 인해 일본에 대한 한국의 여론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여론도 한층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온 지적(知的), 정치적 작업들을 이제 와서 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조건 변화는 없을 터이다.

세번째로 다양화 및 다층화에 관해서도 적어도 관계 악화의 악순환이 여러 영역 혹은 여러 계층에 걸쳐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관계개선의 선순환을 연결시켜 악순환의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입맛에 맞도록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악순환의 연결을 끊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자각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최근 흥미로운 사실이 그 이전에는 한일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이 복수의 영역 및 계층을 상호 연결시켜 긴장도를 고조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국이 그와 같은 연결을 자제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일본이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다.

14) 기미야 다다시 「한일외교협력의 궤적과 그 함의」 이원덕, 기미야 다다시 편저 『한일관계사 1965-2015 1 정치』 역사공간, 2015년, pp.57-86.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후 한국인의 일본방문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인의 한국방문은 상당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방한일본인수의 감소가 한일관계의 악화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한국내 관광자원의 빈약함에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방일한국인수의 증가와 방한일본인수의 감소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네번째로 쌍방향화에 관해서,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져다 준 것은 한일 쌍방의 사회가 서로에게 자극을 가하면서 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해 온 점이 작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교류가 밀접해지고 있는 쌍방향화의 상황 속에서 관계 악화의 악순환이 일단 시작되게 되면 그것이 쌍방 사회의 상대에 대한 강경론을 자극하기 쉽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쌍방향화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점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곧 쌍방으로 하여금 상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상호간 관심 고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쌍방의 사회에 있어 필요하고 적절한 정보를 선택함으로써 쌍방향화로 수반되는 관계 악화의 심화를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쌍방향화 상태에서는 한일관계를 서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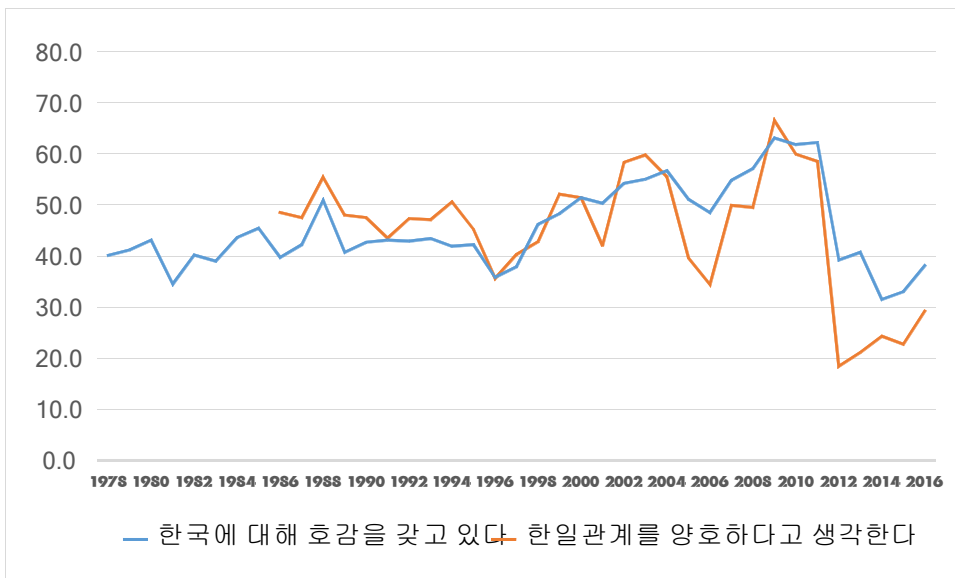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비대칭적 상호보완관계에서 대칭적 상호경쟁관계로 변모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쟁을 대립으로 쉽게 치닫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경쟁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치며

이와 같은 선택은 한일관계의 현 실태를 고려하면 언뜻 장벽이 높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그와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식에는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을 의식한 부분들이 뚜렷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당시 한일간의 뛰어난 지혜가 모여 얻어진 성과이기도 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된 한일행동계획이다. 한일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망각'됨으로 인해 이 행동계획 또한 '망각'되고 만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 행동계획은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만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나타나 있는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사문화(死文化)'되었기 때문에 행동계획도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동계획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것들이 많으며 실제로 추진되어 성과를 올린 것들도 보여진다. 이와 같은 행동계획을 재평가하여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대해 현 실태 속에서의 대응이 아닌 좀더 다른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대응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림1 · 한국에 대한 호감도 및 한일관계의 양호도에 관한 일본 여론의 추이



제1세션 지정토론 1

이호철 (인천대학교 중국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 오늘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김대중도서관에서 한일관계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의의를 가짐
-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인 전환점,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상호존중과 공동협력”의 정신은 여전히 고양되고 실천되어야 할 준거

기미야 다다시 소장님은

-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을 검토하고, 어려운 조건들의 관점에서 현재의 소원한 한일관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 매우 객관적이며 균형있는 분석과 결론을 제시
- 기미야 소장님은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 가능했던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정치지도자의 의지

상호 필요성

+

4 가지 구조적 변용

수평화

균질화

쌍방향화

다양화, 다층화

- 기미야 소장님은 위의 4 가지 구조적 변용 조건들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가능하게 했지만, 또한 한일관계의 회복과 타협을 어렵게 하는 조건으로도 작동
- 즉 상호경쟁, 자기주장 강화, 상호민감성 증대로 타협과 조정의 어려움
- 그럼에도 4 가지 구조적 변용의 조건들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의 절대 이익을 추구하며,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의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토론자 또한 전적으로 동감
- 특히, 부상하는 중국 대응 + 미국과의 동맹관리 + 북핵미사일 대응이라는 공동 협력의 영역을 제시

논평

- 한국외교의 건축에서 한일관계는 하나의 축으로 우호협력의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
- 특히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핵미사일 공동대응은 현 국면에서 긴박한 사안
- 기미야 소장님이 제기하는 4 가지 구조적 변용의 조건들이 분명 한일간 역사문제에 대한 타협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 보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타협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
-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적 타협’을 넘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감성의 합의’가 필요
- 아베 내각에서 특히 이러한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양국 정부, 학계, 언론은 이러한 양국간 감성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상호존중과 공동협력”의 정신이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

제1세션 지정토론 2

보수·진보 정권 하의 한일관계 - 차이를 극복하여 공통이익 확인을 -

미네기시 히로시(峯岸博) (닛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현 상황／문재인정권 출범(2017.5) 자민당총재임기를 ‘연속3기 9년까지’로 변경(2017.3)

〈위안부문제〉

문재인)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는 국민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아베) 전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

〈징용공문제〉

문재인)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아베)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
문재인)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고 한국정부가 보상도 했다

〈한일간의 불씨〉

- 한일위안부합의에 관한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연말)
- 징용공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강경화 외교부장관 ‘판결을 존중하겠다’)

1. 9년 만의 진보정권의 대일정책 진위파악

- ① 진폭이 큰 문대통령의 대일발언에 당혹／위안부합의 및 노무현정권시절의 악몽
- ② 일본 내에 포기분위기, 사태를 움직일 의사 없음／당분간은 대중관계에 주력

2. 북한문제에서의 한일 공통이익

- ① ICBM, 핵실험으로 한국이 미일에 접근／‘트럼프●아베’ 통해 문재인 연결
- ② THAAD 둘러싸고 한중 관계 악화, 남북대화도 추진되지 않음→한국이 ‘한미일’로 회귀

3. 대립에서 ‘적절한 관리’로

- ① 아베정권, 역사 및 영토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소녀상문제도 분란 일으키지 않음
- ② 향후, 북한정세가 위기를 맞던 대화를 향해 나아가던 한일간 협력의 중요성은 증대

4. 한일관계의 ‘레드라인’

- ① 위안부합의의 검증결과, 징용공재판의 판결 후 문재인정권의 대응이 초점
- ② 일본 내에서의 ‘한국기피현상’, 한국 내에서의 합의파기움직임이 고조될 우려, 억제적 대응 가능할까?

5. 2018년이 중요한 해

- ① 평창동계올림픽, 셔틀외교, 한일공동선언 20주년, 한국지방선거
- ② 한국은 두 트랙(Two Track), 일본은 원 트랙(One Track)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젊은 층의 목소리 반영해야.

제1세션 지정토론 3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바라본 문재인정부의 한일관계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진보정권 vs 보수정권, 시민파워 vs Establishment, 대중·대북인식 격차 등의 요인으로 문재인 정부와 아베정권은 매우 이질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올해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긴 했지만, 박근혜정부의 2015년12월 한일 위안부합의를 부정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일본정부와 언론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아베수상 관저 뿐만 아니라, 일본여론과 시민사회, 일한관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반발과 불신을 느끼고 있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에서 한일관계는 별로 달갑지 않은 외교 레거시(legacy)의 축적, 부정적인 상호인식에서 시작한 힘든 출발이었다. 한국 청와대와 일본 수상관저간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한일 외교당국간 파트너십과 전략적 이익 공유, 핵심 연락 채널과 활발한 인적교류, 시민 사회간 상호신뢰가 결여된 상태하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가와 학계전문가, 언론인과 관료 가운데 한일관계에 정통한 인적그룹은 그리 많지 않으며, 아베정권하에서 일한관계에 적극적인 지원 그룹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김대중 정부기 단기간을 제외하면, 한일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복합골절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되었다. 냉전 종결 이후 국가내셔널리즘의 대두, 2005년 중일간 경제 권력지도의 변경, 미중 G2체제의 갈등구조 정착, 한국의 성장과 대중국 경사, 한일간 약화된 전략적 공동이익, 일본의 경기침체와 우경화

등이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후 세대의 등장, 한일 특수 관계론이 아닌 국제과 시각의 확산, 정치인들의 내정 중시 경향, 일본/한국 때리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등이 확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출발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비판과 자극을 절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당선자의 신속한 대일 특사파견, 한일 주요 정치가들의 상호방문, 7월7일 함부르크 G20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관계는 긴장속의 협력 국면을 도출해내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35분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틀외교 재개, 역사인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재인-아베간 대화와 협력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북한 핵실험과 ICBM 발사 위협에 대한 한일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 금년 8월나온 2017년 일본의 방위백서가 북한을 ‘새로운 단계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게임체인저로 등장하면서 동북아의 안보지형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북미간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전략군 사령부의 ICBM 발사, 핵탄두 소형화, 재진입기술 개발, SLBM 추진 등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교란하고 군사적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

한반도 지역의 전쟁과 분쟁 예방을 위해 한일간 안보협력, 한미일간 대북공조를 빈틈없이 수행해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당사자이며,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북미간 상호 공격은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한국과 일본이 당사자 의식을 가지고 북미, 미중간 갈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북공조는 단단한 결속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핵과 미사일 위기속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지만, 양국관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차

레 재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정치가와 만남에서 소녀상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인식을 표시하였다. 일본정부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외교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외교부의 위안부TF 발족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일간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재차 거론하는데 그쳤다. 8월15일 종전기념일에 일본 아베수상과 각료들은 아무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 1985년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아 나카소네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중단했던 이래, 일본 수상과 각료가 전혀 가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일양국 관계가 외견상 순항상태인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한일관계가 반면교사로 작동하고 있다. 임기초반 양자간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정부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피플파워로 탄생한 민주정부이며 따라서 국민적 합의와 보편적인 원칙에 기초한 선택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진보정권의 정당성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위안부합의 재검토 TF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서 당시 12.28 합의 과정을 규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말로 예정된 최종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어디까지나 외교부와 청와대의 선택이다. 물론 위안부TF 위원들은 사안이 지닌 민감성, 휘발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12.28 위안부합의 재검토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구축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본정부와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내 전문가와 지식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내 진보> 진보> 보수> 보수 정권으로 정권교체를 경험하면서, 보수정권 못지않게 진보정권이 한일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느끼고 있다. 한국의 진보정권-일본의 보수정권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선언은 양국관계를 크게 발전시켰다. 김대중정부의 일본문화 개방, 한일 국민교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실질적인 안보협력 증진 등은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한일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한미관계에서 실용적인 외교정책과 정치적 리얼리즘이 발휘된 점도 동시에 평가받아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한미FTA 체결, 이라크 파병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보다 성숙된 동맹으로 발전시켰다. 실용주의와 리얼리즘이 한국 진보정권의 외교적 자산이자 전통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며, 실용주의와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일 양국의 시민

사회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양국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8년10월8일에는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수상간에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천명한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다. 상호간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한 한일 양국은, 아시아 지역내 얼마 안되는 OECD 회원국이자 선진국으로, 상호간 든든한 파트너임이 분명하다. 동북아 분쟁방지와 평화체제 구축, 동아시아의 공동발전 모델, 그리고 역내 평화번영의 공공재로서 한일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세션 발표문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협력의 모색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1. 들어가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신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성장과 복지를 통한 경제의 선진화와 함께 대외적으로 주요국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화가 정책의 핵심축이 되어 있다. 특히 후자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화해와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국제경제의 불투명성, 미·중 간 세력균형의 변화 및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안보·경제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자유무역체제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의 출범 이후 통상정책과 대북정책 관련 조율이 한·미관계의 현안이 되어 있다. 한·중수교 25주년의 해를 맞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냉각된 한·중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대응하면서 북핵과 사드와 같은 전략·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편 동북아에서는 ‘지정학의 도래’를 맞아 ‘정체성의 정치’가 시대적 대세로 등장하였다. 역내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강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여론에 편승한 결과 해양·영토 주권과 과거사 관련 공방이 치열해졌고, 외교가 국내정치의 수단화하면서 대외관계에서 정경분리원칙의 훼손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배와 대륙침략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 국제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고착화하였다.

이와 같은 대외환경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일제하 징용피해자, 독도 문제와 같은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 외에, 동아시아 파워 · 밸런스 변화, 정체성의 정치라는 맥락 속에서 대중국 정책이나 북한 문제와 같은 안보 이슈와 연동되어 전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일외교의 과제에는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에 한일 간의 정치·안보 문제, 경제협력, 민간교류 등 양자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그리고 일본의 보수화 관련 한국의 중장기 대책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한·일 간의 과거사 관련 제반 현안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거시적인 지역전략의 맥락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적 의미를 재고하고 양국 간의 미래비전의 문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일관계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요인을 살펴보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시각에서 한일협력의 방향 및 대일외교의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과거사 중심 대일외교의 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의 경색국면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3년 동안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대일외교에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우선한 결과,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기타 영역에서의 협력이 소원해졌다. 2015년 말에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동년 말부터 한일관계는 다시 대결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한국 내에서의 위안부 재협상 문제 제기 등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한·일 관계는 총체적인 난국에 놓여 있었다.

돌이켜 보면, 2011년에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 관련 판결 이후 위안부 문제는 줄곧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관련 발언도 사실상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8.15 경축사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고, 워싱턴 D.C와 유엔 등 국제사회를 무대로 위안부 관련 ‘역사전쟁’을 전개하는 등 우리의 대일외교는 위안부 문제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상호불신은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한·일 통화스왑의 중단,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의 감소, 사회문화·인적 교류의 위축, 재일한국인의 민생 피해 및 한일 안보협력의 정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일본 내 한류는 급속히 위축되었고, 관광객과 유학생 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일본 내의 ‘헤이트 스피치’ 발생 등에 의해 100만 명에 이르는 재일한국인의 민생문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기반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환경의 조성이라는 중장기 외교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정권 하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소통과 협력이 안 되면 양국 모두 손해를 보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아가 한·일관계 악화는 우리 대미외교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위안부 문제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전방위적 대일압박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견제하는 성과를 낳았다. 한일 간 위안부 갈등에 따른 한·미·일 공조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오바마 정부는 한일관계의 중재에 나섰고, 보수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5년 말에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한·일 간의 ‘역사전쟁’은 미국 조야에 ‘한국 피로증’을 확산시켰고,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래협력보다 과거 문제에 집착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및 한·미관계에 부담을 남기고 있다. 말하자면, 한·일관계는 한·미관계의 주요현안이 된 것이다.

3. 정체성의 정치와 과거사 문제의 쟁점화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역사직시 그리고 한일 간의 과거사 화해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기본토대라는 사실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아베 내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사죄와 반성으로 일관하던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역사수정주의’의 색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헌법이나 미·일안보조약과 같이 ‘전후 체제’를 규정하는 기본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고, 지역/글로벌 차원의 대외관여를 확대해오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 유동화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지역강국화 움직임 특히, 과거사 반성이 수반하지 않는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국가화의 가능성은 우리의 우려와 경계를 부르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및 노무현 등 역대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였지만, 과거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되었고, 소원해진 관계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정권이 교체되는 양상을 반복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시종일관 과거사 문제가 기타 현안에 우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기초하여 한일관계를 관리하던 이른바 ‘65년 체제’가 시대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의 입장 차이를 간직한 채 안보와 경제 논리를 우선하여 타결된 한일회

담은 냉전기를 통해 한반도 안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의 쟁점화라는 태생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 한일관계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축으로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 배경에는 냉전 종결에 따른 한일 간 안보연대감의 약화,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외교문제의 정치 쟁점화,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와 비정부 주체의 영향력 증대 등이 있다. 한일 양국 간에 상대적인 국력 차이는 축소되었고,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게 되었다. 양국 간의 민간교류와 문화교류가 확대·심화되고, 대외관계에서 여론과 NGO 등 비정부 주체의 역할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한일 양국에서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와 같은 외교현안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외교 당국의 현안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일본 정계에서 ‘강한 외교’를 외치는 전후세대의 보수정치가들이 주류로 등장하고 역사 수정주의, 영토민족주의가 노골화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기본으로 하던 일본의 대외 태도가 바뀌고, 전후 일본 외교의 기조였던 정경분리원칙이 훼손되는 경우가 늘어났다(예를 들어,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통화스왑, 한류 문제의 연계).

특히 2006년에 처음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은 국민통합을 위해 이념과 역사를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정치의 보수화를 대표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추구하는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헌법개정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개혁, 자위대의 군대화,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강화, 대외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확보를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 ‘강한 일본’의 건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베 내각과 자민당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려고 하였고, 2015년에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 기념 총리 담화(아베 담화)를 발표하여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과거회귀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역사인식이 표출될 때마다 한국사회는 반발하였고, 한일관계는 요동쳤다.

4. 동북아 ‘공공재’인 한일협력의 전략성

2010년대 들어 현실주의 국제정치관이 힘을 얻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는 우리 외교에 국익 극대화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재평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일간의 협력관계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체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가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도 안정화 및 통일 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한·일관계는 한·미관계와 함께 한국외교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자, 대중, 대러, 대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인 것이다.

정치경제체제를 공유하는 한·일의 협력관계는 양국의 국익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G-2' 질서의 출현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이들 강대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역내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중견국의 역할일 것이다. 마중 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질서가 역내 중소국가들에게 불편한 것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우선주의의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만큼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중요성 역시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의 침체와 불안정 요인,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의 경색 등을 감안한다면,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사실 일본의 지역적 안보역할 확대가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가치는 이중적이다.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질서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군사적 의미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일본이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은 채 재무장할 경우 한국, 중국 등 과거 침략 및 식민 지배의 피해를 당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지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건설적 관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시야에 넣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다면, 일본은 탈냉전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이 지역질서를 혼란시키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한편 아베 정권은 대내적으로 보수이념의 제도화와 군사적 의미의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미·일관계 강화, 미,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와 함께 일·중관계의 안정화, 일·러관계의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외교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수면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일본 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 한·중관계의 긴밀화, 대북 정책의 재조정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의 상대적 유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문 대통령의 정책 성향에 대한 일본의 대중적 시각은 ‘반일’과 ‘친북’이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에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주장했다는 것이 ‘반일’의 징표였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대화를 중시했던 것은 ‘친북’의 근거가 되었다. 일본 사회가 문재인 정부를 ‘반일 친북’으로 인식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노무현-고이즈미 정부 하에서 양국은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일본인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여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고,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미·일 협력관계를 훼손시킨 장본인으로 기억되어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이념성향을 계승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의 많은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정부 2.0’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최근 에스컬레이트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가져와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이와 같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에 대표되듯이 해방 이후 한·일의 상호인식은 이중적이었다. 한국에게 일본은 ‘청산의 대상’이자, 냉전체제에서 살아남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준(準)동맹국(quasi-alliance)’이었다. 일본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거사 문제로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골프스트’를 옮겨가면서 집요하게 대일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일본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일간의 원활한 안보협력을 희망해 왔다.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한·일관계가 이완되었다고 하지만,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쌍방이 손해를 보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특히 동북아의 최근 정세는 양국이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의 한일관계가 식민지배의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수직적인 특수 관계의 성격이 강했다면, ‘신정상(new normal)’의 한·일관계는 수평적인 보통의 국가관계를 특징으로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상대방의 전략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협력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로서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지역적이고 다자적인 관점에서 일본을 제약요인이 아니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과거사 프레임에 속박되지 않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5. 대일외교의 접근법

위에서 살펴본 대로 작금의 한일관계에는 탈냉전 이후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의 쟁점화라는 이완요인과 함께,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 증대라는 결속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대일외교는 보수화하는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와 안보 이슈 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고 신뢰관계를 재구축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의 핵심은 양국 간의 개별 현안 중심의 대응을 넘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일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한 토대마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결코 새로운 작업이 아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에 이미 공동 작업을 통해 “과거 직시”, “상호이해와 신뢰”, “선린우호협력”, “공생의 복합 네트워크” 등

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일 미래비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오부치 내각을 상대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우호협력관계”를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역대 최상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한일협력과 남북대화를 양자택일의 배타적 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병행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대일 정책에 관한 한 김대중 정부 시기의 노력과 성과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보와 경제의 불투명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한일협력관계는 우리 외교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한 필요조건인바,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권 초기의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여 대일관계의 개선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간에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양국관계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에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과거와 미래의’ 시점을 공유하려는 시도이다. 과거사 직시와 상호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지배·피지배의 기억에 집착하는 과거회귀적인 발상”이나 “미래의 밝은 협력만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둘째, ‘양자에서 다자로의’ 관계 전환이다. 양국 간 현안에만 매몰되지 않고, 북한 문제, 중국 부상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지역·세계 질서의 구축이라는 다자적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상호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셋째, ‘정부 주도에서 시민사회로’ 주체의 다양화이다. 한일관계에서 정부-비정부 주체(여론, NGO)간 소통 강화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과도한 민족주의, 포퓰리즘, 외교의 정치수단화를 견제하여 한일 관계의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일외교 기조로서 ‘분리대응’의 원칙 즉, 투·트랙 어프로치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지적한 대로 한일은 경제 및 안보 등 양자 현안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안 될 경우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도에 있다. 따라서 한일 간에 과거사나 독도 관련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타 분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분리 대응’이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면서 기타 분야

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분리대응’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과도한 경사에서 대일관계의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여론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반일감정이 대일외교를 지배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기존의 관행과 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징용 등 피해자 보상 관련 재판은 판결 여하에 따라 위안부 문제 이상으로 한일관계에 미치는 폭발성이 클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사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재발·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 차원의 노력과 역사인식의 공유라는 ‘완치’를 위한 장기 처방을 병행하여야 한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역사문제를 연구자, 교육자를 중심으로 전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공유를 위한 대내외 공공외교의 강화가 중요하다. 외교당국이 한·일관계 전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역사인식의 공유와 비전 도출을 유도하는 역할로 선회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관련 전문가, NGO,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담당 대사직을 신설하여 NGO 관계자나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사회의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과거사 반성과 화해가 세계적 대세이며, 역사 왜곡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6. 한·일 협력의 액션 플랜

문재인 정부는 당분간 일본에서는 보수 정권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들어 일본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자민당 내의 대안세력이나 야당의 약체화, 아베 외교의 성과에 대한 높은 지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아베 내각은 2018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 일본 사회의 총체적 보수화

를 볼 때, 차기 일본 정부도 보수정권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일본 측의 전향적인 과거사 반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냉철히 인식하고 대일정책에 임해야 한다.

첫째,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회담과 통화, 상호 특사 교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관계의 향배는 위안부 문제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최대 관심사였다. 아베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여, 양국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정서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에 의한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계승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현재 외교부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에는 2015년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돌려주자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합의안 도출은 난망한 바, 위안부 문제는 미해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일관계의 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정책 연속성 관련 한일 간 책임공방으로 이어져 외교적 부담과 국익 손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합의안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2015년 합의문의 업그레이드, (2)아베총리의 직접적인 사죄반성 표명, (3)위안부 문제의 공동연구·조사·교육 위원회의 설치 등을 중심으로 대일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소녀상 이전 문제는 그 여건 조성이 중요한바, 위안부 기념관을 건립하여 대사관 및 영사관 앞의 소녀상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일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해 정상간 교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전무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양국 정상간 교류는 원활한 한일관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 7월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였지만, 향후에도 각종 다자회의의 계기 혹은 ‘셔틀 외교’로 한일 정상간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혹은 2018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상기 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가칭 ‘한일 신시대 협력 선언 2018’ 즉, ‘한일파크너십 공동선언 2.0’을 발표하여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대로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20주년을 맞아 한일 정상이 1998년 선언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과거사 화해, 안보협력, 청년 일자리 협력, 한일 FTA, 청소년-지방자치-시민사회 교류, 생태-환경협력, 에너지협력 등 제반 협력방안을 담은 새로운 선언을 제시한다면, 한일관계 발전에 대단히 유의미한 사건이 될 것이다.

셋째, 한일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한·미동맹의 실효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과거사 문제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그 속도를 조절하여 추진해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일본의 안보법제는 2016년 3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이 중국·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수록,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커질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일 및 한·미·일 간 안보협력 강화(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충실화, ACSA(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등)에 대한 미·일의 압력이 예상되는데, 대북 억지력 제고 차원의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미·일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근거로 한일 안보협력 추진은 우리에게 유리한 속도가 전제임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 한일 안보협력 등과 같은 외교안보현안은 미중과의 관계설정이라는 한국의 중장기 국가전략과 관련되는 민감한 사안인바, 그 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국내외의 논쟁이 유발될 것이다. 탈냉전 이후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정권의 이념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의 강화, 한·중협력의 확대, 한일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안정화 및 통일기반의 조성이라는 목표 간에 상충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영향력과 조정력이 극대화되는 전략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한·미·일 간에 대북 공조를 강화해야 하지만, 대외관계 설정에서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의 출현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역행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일외교 기조인 투·트랙 어프로치의 연장선에서, 역사, 정치, 안보 분야에서 대립하더라도 상호 이득이 되는 실질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국제경제질서의 불투명성에 대비하여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개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동요하는 아태지역 경제질서의 안정화를 위해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신 무역규범 제정에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간 인력이동 촉진 및 일자리 공동시장의 제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본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반면 한국은 청년실업이 심각한바, 양국의 인력이동을 촉진하고 숙련 노동시장의 통합을 통해 청년 고용문제 해소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협력의 일환으로 3국 간의 올림픽 교류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 등 동북아에서 연달아 열리는 올림픽을 3국이 연계하여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실시한다면, 올림픽 개최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3국 협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세션 지정토론 1

요네무라 코이치(米村耕一)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북한은 지난 8월 29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9월3일에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반도정세의 긴장상태는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달 13일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동참했을 때 비로소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 한국도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한미일의 입장에서 그 중에서 특히 ‘핵억지력’에 관해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목표이다. 한편 북한이 이미 수차례 그들의 ‘핵억지력’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목표를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하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예측을 불허하는 언행이다.

예를 들면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8월 8일에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위협했다. 그런데 22일에는 돌연 ‘틀릴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북한이 ‘화성-12형’을 발사하자 이번에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해왔고 터무니없는 돈도 지불했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에 일관성 있는 전략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미국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전의 미국 정권에 비해서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핵미사일능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계속해서 완성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여동안 북한의 미사일개발 속도는 너무나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봄, 나는 베이징에서 조선인민군출신자로 지금도 필시 군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한 사업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우리에게는 바닷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력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SLBM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지 놀라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니 당시만 해도 모두들 ‘설마’하고 웃었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8월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의 발사실험에 성공하였다. 2015년 5월에 북한 언론이 수중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을 때에도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SLBM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향상을 통해 ‘세계의 정치구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으며 핵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흥정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자신감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한일 공통의 목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핵미사일기술 진전으로 뒷받침된 북한의 ‘자신감’과 이에 대해 ‘예측불허’의 언행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미행정부의 ‘초조함’이 충돌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다. 한미군과 북한군이 전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서울도 화염에 휩싸이게 되겠지만 일본의 주요 도시도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모면하는 것 그리고 또 장래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협상을 개시하는 것, 이는 전부 한일양국 모두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다. 그리고 특히 후자는 실현이 매우 어려운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도 매우 중요하며 또 반대로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경우에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은 충분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함께 설득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현실은 북한을 둘러싼 주변 5개국 중에서 한일 양국은 둘다 핵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영향력이 가장

적으며 그런 반면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동향에 따라서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나라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일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일 간에는 위안부문제 등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역사문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문제에 지금 당장 손을 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양국 모두에게 감정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에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정부에 의한 명확한 책임 표명과 사죄가 포함된 2015년 한일간 위안부합의에 의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져 한국 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한 피로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은 북한의 핵문제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길러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역사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2세션 지정토론 2

구라타 히데야(倉田秀也) (방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1. 한일관계의 두 가지 차원: ‘안보’와 ‘도의’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관계는 미일동맹의 종속변수에 가깝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한일관계란 ‘안보 상의 필요성’도 물론 있지만 ‘도의(道義)의 실현’이라는 측면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의의 실현’이란 건국 후 초기의 대일외교에서 보여지듯이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일본을 추궁함으로써 도의적 우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수교에 이르게 된 것은 다름아닌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정권과 박정희 정권 간에 ‘안보상의 필요성’이 공유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한일수교로 ‘도의’라는 측면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또 안보협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진 것도 아니었다. 한일수교 이후에도 한일관계는 ‘안보’와 ‘도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한일관계에 있어 ‘안보’와 ‘도의’의 두가지 측면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그 상관관계에 관하여 빅터 차는 일종의 경험법칙을 도출해냈다. 그것은 냉전기의 닉슨, 카터 정권과 같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커미트먼트(commitment, 공약)를 약화시키는 자세를 보였을 때 한국은 ‘도의’의 비중을 일부러 낮춰서 대일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반대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이 확실할 때 한국은 ‘도의’를 전면내세우게 되어 한일관계는 악화된다는 것이다. 빅터 차가 말하듯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을 변수로 보고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적어도 냉전기의 한 시기에서만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이 민주화를 달성하여 북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북한의 위협을 한국 스스로 상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한일관계를 결정하는 유력한 변수는 더 이상 아니게 되

었다. 예를 들면 노무현정권기에 부시정권이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더불어 여단규모이기는 하나 이를 감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일관계는 흔들렸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약화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초래한다는 경험법칙은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 한미일 안보협력과 ‘위안부합의’: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이라는 변수

김대중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공통항-‘안보’라고 하는 ‘자성(磁性)’

박근혜정권 시절의 한미관계를 돌이켜 보면 김대중정권과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김대중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은 둘다 재임 중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및 재개정이라고 하는 이른바 미일동맹의 ‘갱신’에 직면했다. 또 양 정권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는 하나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도입에서도 공통적이다. 김대중정권은 한정적이기는 하나 이를 수용해 이것이 후에 PAC-2 배치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 또한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사드 도입을 단행했다.

이렇게 한미일관계가 전개된 것은 다름 아닌 그 때의 한국 정권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을 확실하게 하였고 미국 또한 이에 응해주었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재야시절 때부터 ‘냉전구조 해체’를 구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직후부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주장하며 재임 기간 내내 -남북정상회담을 거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뒤흔드는 일은 없었다. ‘박근혜정권도 이에 관해서는 거의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면 미군이 쥐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당초 2015년 말에 한국군에 반환될 예정이었는데 2014년 가을에 이를 연기시키고 추후 이 문제는 ‘조건부’로 논의한다는 데에 미국측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뿐 아니라 박근혜정권은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언행은 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도 대체적으로 이에 보답해주었다. 김대중정권과 박근혜정권은 모두 ‘안보’의 ‘자력(磁力)’이 작용하는 ‘자성’을 갖추고 이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의 확약으로 보답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두 정권에 공통되는 ‘안보’의 ‘자성’은 한일관계에도 파급되었다. 김대중 정권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본회의의 주제인 ‘한일파트너십선언’과 ‘한일행동계획’

은 1998년 10월 김대중의 방일 시에 발표된 것이다.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주변사태법’을 성립시켜 안보관련 국내법을 정비했으나 이 법이 그 이후의 한일관계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다. 박근혜정권기에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재개정 후 ‘안보법제’의 성립으로 국내법을 정비했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 한일안보관계의 발전은 이러한 미일동맹의 ‘갱신’과 국내법 정비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참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도 이러한 미일 동맹의 ‘갱신’ 및 국내법 정비와 동시 병행된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빅터 차의 논의와는 대조적으로 냉전종식 이후의 한일관계 개선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약화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안보’라고 하는 ‘자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의 확약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다.

‘위안부문제’—‘도의’의 후퇴인가, 복권(復權)인가

확실히 박근혜정권은 처음에는 ‘위안부문제’를 내세우면서 한일관계가 냉각되었는데 결국 박근혜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는 일본땅을 한번도 밟지 않은 채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박근혜가 ‘안보’라고 하는 ‘자성’을 지니고 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약을 뒤흔들지 않았던 것은 한일관계의 개선도 가져다 주었다. 2015년 말 한일 간 ‘위안부합의’는 그 소산이었다.

일본의 입장은 여기서 상세히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수교협정으로 ‘청구권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로 안보협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서 이 문제가 ‘청구권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해결을 시도해 박근혜정권도 이에 응한 것이다.

실제로 ‘위안부합의’로 일본이 한국의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정부의 ‘의료 복지지원사업’으로 출연된 것이다. 대부분의 위안부들이 그 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이같은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한일간의 ‘화해’와 위안부의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또한 '위안부합의' 시에 발표된 기사다 일본 외무상의 담화 중 한 구절인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고노담화'를 확실하게 답습하고 있다. 또 이에 앞선 아베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언급된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는 '무라야마담화'를 답습하고 있다. 아베총리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거나 아베정권의 역사관을 '역사수정주의'라고 하는 비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이 이들 담화를 답습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이야말로 정권교체로 과거의 합의를 답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낳는다. '위안부합의'가 '불가역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합의가 단순히 아베정권과 박근혜정권 사이의 합의가 아니라 다른 아닌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전시 하에서의 여성의 보편적 인권'이라는 한국의 주장에도 위화감을 느낀다. '인권'문제에서 '전시 하의 여성의 인권'만을 따로 떼어내어 대일비판을 가하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가치관에 기초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다. 인권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에서 현재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인권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키는 한국의 자세에 대해서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은 대일비판에만 국한하는 고유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3. 문재인정권과 '전시작전통제권' —— '자주군대'의 주장과 한일안보관계

일본에서는 문재인정권과 노무현정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두 정권이 같은 '진보주의'라는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진보주의'는 글의 서두부분에서 언급한 냉전기의 보수정권에 대한 안티테제(반정립)를 주창한다. 따라서 '진보주의'는 북한의 위협을 대미동맹으로 억제시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저감시키기 위해 남북대화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교 및 안보에 관한 한 한국의 '보수', '진보'의 구도는 '동맹파', '민족파' 구도로 치환될 수 있다.

물론 문재인정권이 노무현정권 시절의 비서실장을 맡았기에 대북, 외교정책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정권기에 비서실장의 임무를 맡은 최측근으로서 문재인대통령은 당시 한미동맹의 동요를 비롯해 노무현정권의 '부정적 유산'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ICBM의 실전배치를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많은 측면에서 일본을 안도하게 만들었다. 문재인은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마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정권의 '민족파'로서의 측면은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에 전작권의 반환에 관하여 '조건에 기초'한다고 해 박근혜정권 시의 합의를 계승하면서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과거의 한미간 합의를 보더라도 전작권의 반환문제는 미군의 재편과 조건 관계에 있다. 즉 전작권이 한국군에 반환되면 대북 억지의 중추는 한국군이 되며 미군은 서울 이북에서 떨어져 남쪽으로 이전하게 된다. 박근혜정권이 반환을 연기시켰기 때문에 현재 서울 이북에는 제210포병여단 등이 잔류해 있는데 만약에 전작권이 한국군에 반환되면 -과거의 한미합의에 의해-미군은 남쪽으로 이전해야한다. 이는 확실히 대북 억지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시켜 미군의 군사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북한의 대남무력행사의 문턱은 더욱 낮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게 된다.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수립되어 이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제210포병여단에 중추적역할이 부여되었다. 이 부대가 후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그 중추를 상실하게 되어 북한의 대남무력행사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작권이 한국군에 반환되는 것은 한일간 안보협력에 과제를 낳게 된다. 현재의 한미연합군체제가 존재하는 한 한국이 '전시'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고 있는 미군-및 호주군-에 후방지원을 하여 미군이 전작권을 장악하는 이상 한국군에 대한 지원은 미군을 경유하게 된다. 그런데 전작권이 한국군에 반환되면 한국군이 독자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어 '전시'에 일본자위

대는 한국군과 직접적인 지원 관계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말기에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한일간에는 여전히 ACSA가 체결되지 않고 있다.

전작권 문제가 한미간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나 이 문제가 한일간 안보협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한국은 대북억지력을 떨어트리는 데다가 '전시'의 한일안보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제2세션 지정토론 3

황재호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센터 소장)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도전은 국내보다는 국제정세에서 오고 있다는 조양현 교수의 지적에 공감. 현재 동북아 안보정세는 강한 국가 열망과 함께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복잡하게 동시 작용하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대서양과 태평양 두 축으로 움직여 왔음. 굳건해 보이던 미국 주도 질서의 균열은 의외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왔음. 대서양의 브렉시트와 함께 미국의 또 다른 축 태평양에서도 현 질서의 탈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음. 히스토렉시트(History Exit), 전후 처리 과정에서 청산되지 못한 역사문제들이 국제질서의 혼란을 틈타 다시 부딪치고 있음. 중일 간 다오위다오(센카쿠)의 동중국해에 이어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난사군도의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상은 역사의 후유증임.

차이넥시트(China Exit), 중국의 전후 질서에 대한 변경 욕구가 강해지고 있음. 이에 재팩시트(Japan Exit), 일본의 전열 재정비와 대응이 빨라지고 있음.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것은 경제침체보다 국가전략이었음. 2010년을 기점으로 경제마저도 중국에 추월당하면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음. 아베의 2차 집권 이후 한판 겨루겠다는 사무라이의 결기가 느껴짐. 다오위다오(센카쿠) 갈등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중·일 간 본격적 경쟁의 파열음임. 시진핑과 아베 집권의 겹치는 시기는 중국이 역내 리더십을 굳히기 전 일본이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됨.

한국의 이전 정부들은 미중일 주요 3강중에서 한 관계가 좋지 않아도 다른 한 두 관계는 좋았었는데 이번 정부는 시작부터 한미일 모두 좋지 않은 환경을 물려받았음. 트럼프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모두 손익대차에 따라 다루고 있음. 위안부문제 갈등으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로 재일동포의 민생문제에 악영향을 미쳤듯 현재는 사드문제 갈등으로 한중관계 악화로 재중 한국인의 민생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과 오버랩됨.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문제를 재협상하려 한다면 한국의 대외정책에 더 어려운 국면이 빠지게 됨. 단,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요인들이 있음. 문 정부 집권 직후부터 북한위협이 급부상해 한일관계의 갈등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음.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이 지게 되면 트럼프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됨.

일본정부의 총체적 보수화로 전향적인 과거사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움.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계속 받기도 어렵고 그나마 그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도 힘든 일임. 양국의 긴장관계는 많고 적음은 있지만 일정한 책임을 공유함. 양국관계는 역사, 문화적으로 애증관계인데, 조교수 말씀처럼 한일 협력관계가 동북아 지역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신형(新型) 한일관계를 수립해야 함

첫째 양국관계의 신창타이가 필요함. 신창타이란 한마디로 거품을 빼는 것임. 양국 간 지나친 기대는 접고 실사구시하자는 것임. 둘째 양국은 자국의 국내정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해선 안됨. 역사적 책임감과 정치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민감한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함. 셋째 일본식 도광양회가 필요함. 일본의 재굴기전략에 겸손함이 역시 들어가야 함. 넷째, 신패러다임을 같이 추진함. 불안한 미래 위협을 개별적으로 넘을 것인가, 함께 극복할 것인가부터 정한 후, 만약 공감한다면 협생의 길을 같이 가야 함.

결론적으로 한일의 애증에서 증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편작이 채(蔡)환공의 병을 고치듯(諱疾忌醫) 해야 함. 애증에서 증이 더 커지면 이제 양국 협력의 미래는 어두울 것임. 애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내실 있는 논의와 현명한 결정이 필요함.

金大中(キム・デジュン)・小渕宣言19周年記念国際学術会議

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 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





金大中(キム・デジュン)・小渕宣言19周年記念国際学術会議
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

基調講演

「21世紀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 宣言に立ち返ろう」

チェ・サンヨン (高麗大学名誉教授・元駐日韓国大使)

崔相龍 “21世紀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立ち返ろう”

李鍾元ほか編集、「東アジア和解への道」(岩波書店：2016年9月)

「二一世紀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に立ち返ろう

崔 相 龍

現在の日中韓関係

韓日関係は今大変厳しい状況にある。これを打開するための道は何かについて、具体的に論じていきたい。日本と中国と韓国は、近現代史の中で、世界に向けて大きなメッセージを発してきた。一九世紀後半、日本は西洋ではない、このアジアで、自らの力で近代国家をつくり出した大国である。中国は人類史上、少なくとも二五〇〇年にわたって世界の中心軸の一つであった。そして、一九七八年以来、改革開放を一貫して推進してきた。今では社会主義市場経済の成功事例として誰が高く評価する大国である。

韓国は、戦後貧しい国としてスタートした。しかし、懸命に近代化に取り組み、産業化も成し遂げ、民主化も達成し、情報化もある程度実現してきた。あまり知られてはいないが、アジアで初めて下からの変革運動、下からの民主化運動を行い、血を流して民主化を勝ち取った国である。その点において、私は韓国に生まれたことを誇りに思っている。この魅力的な三カ国が協力すれば、世界に対してかなり重要な発信ができ、貢献ができる。全ての人々が平和を論じているが、現状はそのような状況ではない。もし、中国、日本、韓国が、EUのような共同体ではなくても、それに近い

「21世紀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に……

協力体を作れば、西洋、アメリカは内心、尊敬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白永瑞教授は「東アジアの分断構造」ということに言及したが、もしわれわれの力が足りなくて分断が固定化してしまうなら、「自家分断」と呼ぶべきだろう。外からの圧力によってわれわれが分断したことにはならないからである。日中韓の指導者のミスリードによって葛藤を繰り返しているのである。もし、われわれが協力をして共同体を作ることができれば、世界の平和に寄与するだけでなく、東アジアの平和を保障できるものになるということを力説しておきたい。

安重根^{アンジュン}が三〇歳代のとき、死刑執行前に書いた本が、政治的遺言である『東洋平和論』である。

内容はやや抽象的だが日中韓によるアジアの平和論である。そういった意味で、日中韓の関係で平和を論じるときは、誰よりもまず安重根の発想を引用する必要がある。内容を具体的に見ると、とても素晴らしい考えである。共同銀行を作り、日中韓が共同の軍隊を作ろうという独創的なポジティブなアイディアである。今の三国関係をみると夢のような話である。

私は習近平主席の「中国復興の夢」、安倍首相の「積極的平和主義」、朴槿恵大統領の「北東アジア平和構想」を熟読した。率直に言って、この三人のリーダーの発想の中に、日中韓の平和協力についての切実な思いは伝わってこない。現在の日中韓の人口は世界の二三%、GDPは二〇%以上、外貨準備は五〇%である。週に二〇〇便以上の飛行機が往来し、一年に一七〇〇万人が往来している。相互往来量は未曾有の勢いで増えている。いくらでも共同体が誕生できる状況は整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現時点ではそれは樂觀視でき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第3章 韓国知識人が提起する歴史和解

これからの日中韓に提案したいこと

健全な安定した三国間関係を構築するために三つのことを提案する。第一に、二〇一五年は日中韓首脳会談を韓国で開催すべきである(これは二〇一五年末にソウルで実現した…編者注)。これは韓国政府の義務で、もともと二〇一三年に開催すべきであった。正直に言えば、義務を怠ったわけである。二〇一四年に韓日関係が悪化して延期し、二〇一五年にも実現できなければ、とんでもない事態になると痛感した。これは必ず実現すべきであり、韓国政府はできる力がある。

第二に、政治、軍事、安全保障に争点がある場合でも、文化交流がとても役立つ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おきたい。日中韓のアーティストによる常設オーケストラ、北京・ソウル・東京の頭文字を取った仮称 BeSeTo オーケストラの創設を、私はこれまで終始一貫して提案してきた。それが私の夢でもある。多くの日本のアーティスト、そして前職の総理も賛成してくださった。韓国も賛成する。中国の指導者も賛成してくれると確信している。

二〇一四年二月一七日、韓国国会議長の中国訪問団の顧問として、習近平主席の表敬に同行した。そのとき、習主席は「日中韓のアーティストは極めて豊かである」と言われた。質的にも量的にも豊富なのが日本だ。韓国も数は少ないが、クオリティはいいと思う。世界的なアーティストが多い。中国も素晴らしい。一三億の人口の熱気によって、二〇代の天才的な指揮者が出てくるようになっていく。これらのことから、日中韓三カ国の豊かな芸術的なリソースを生かして、オーケストラをつくらうというのが夢なのである。直ちに実現できないとしても、いくらでも、その都度、必要なときに芸術団をつくることのできるのではないか。そして、その公演を東京ドーム、天安門

「21世紀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に……

広場、ソウルの広場で、一年に一回か二回やれば、日中韓の人々にとってどんなに良いだろうか。昔、中国とアメリカがピンポン外交を成功させた。日中韓の芸術の力によって、ソフトパワーによって三国間関係の改善が進む。それがどんなに意味あることか。

第三に、学術的な交流の問題である。日中韓は歴史がとても長い国である。この日中韓が共有できる普遍的な思想、普遍的な哲学を探究する作業が、学界の使命である。その一つの例として、一七世紀の中国の黄宗羲、一八世紀の朝鮮の朴趾源^{バクジウォン}、一九世紀の日本の横井小楠は、当時の普遍的な知識体系であった儒教を受け入れながら、主体的に西洋を受け入れた人たちである。今流の表現をするなら、偉大なパブリックフィロソファー(公共哲学者)である。こういった日中韓が共有できる思想と哲学を共同で研究し、共同で発表すれば相互の思想的理解が進むことになる。これはあくまでも一つの例であり、このような問題意識を持てば、いくらでも関連したアジェンダを設定することが出来るだろう。

二一世紀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

やはり韓日関係は、心配・懸念せざるを得ない。私は韓日関係が厳しくなるたびに繰り返して、日本の小渕恵三首相と金大中大統領が一九九八年に共同で署名した「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読むことにしている。是非読まれることをお勧めしたい。ところが、不思議にも、日本も韓国も、現政権はそのことについてあまり言及しない。

この「共同宣言」は素晴らしい資産であり、今回のシンポジウムが金大中・小渕による「韓日共

第3章 韓国知識人が提起する歴史和解

「同宣言」を主要議題の一つとして、開かれたことは大変意義のあることである。韓日関係は厳しい。昔も現在も、そして未来もさまざまな争点があるだろう。韓日関係に関する研究や自分の経験から考えて、日本の一億二〇〇〇万人、南北韓の七〇〇〇万人が皆満足できるような答えは出てこないだろう。それならば、一九六五年の国交正常化以来、相対的に最も良かった小渕・金大中「韓日共同宣言」の内容を基礎として関係構築を図るべきである。

あらためて言う、それは「村山談話」に基点を置いている。村山談話は、社会党出身の村山氏の歴史観に基づいたものである。日本歴代の自民党首相は村山氏の歴史観に対して全面的には同意しないかもしれないが、その後の自民党政権、小渕首相が署名した「共同宣言」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精神をなぜ受け継ぐことができないのか。

同じ批判は、韓国政府にも向けられる。これは金大中政権の最大の成果である。そのとき、私は駐日大使だったが、大使の間、日本の「歴史教科書問題」で全般的に両国関係は極めて厳しい状態であった。私は何度も召喚されて帰国した。しかし、後半の一年間は、まさにこ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の実践者として素晴らしい時間をすごすことができた。

日本の教科書問題に対する韓国側の姿勢は非常に厳しかったが、問題の「新しい教科書」の採択率は〇・〇三九%にすぎなかった。私はその結果を見ることで、かえって日本の国民に対する尊敬の念が高まった。日本国民の判断に対して、私の信頼は揺るがないものがある。時々、この話を韓国の教壇でも話すことがある。

「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二項目目が非常に重要である。最初は村山談話の具体化である。

「21世紀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に……

日本が韓国に対して行った植民地統治に対する反省と謝罪である。日本が韓国に対して行ったことの反省の念が書かれている。それ以上に、われわれ韓国人が要求するものはない。村山談話は非常に自発的にそういうことを言ってくれたのである。

続いて小渕首相が率直な歴史観を語ることによって、金大統領が初めて「国家としての和解」を決断した。「謝罪と和解」、そして「和合」である。和解の一つの例として、ご存じのように「文化開放」があった。「文化開放」は、非常に自然なことである。しかし、韓日の歴史の中で文化開放というのはたやすい決定ではなかった。文化は単純な文化ではない。文化産業はお金がかかっており、国の競争力の問題である。当時、韓国人は八五%が「文化開放」に反対の意を表明した。

そのときのエピソードを一つ挙げると、私は金大統領から「崔相龍、文化開放についてどう思うか」と質問を受けた。私は動揺することなく、「賛成だ」と言った。大統領は「国民が皆、反対するのに、どうして賛成か」と。「文化交流というものは、ある時点の問題だけではない。過去、現在、未来をつなぐ相互学習の過程であり、互いに学べるものである。われわれも昔、古代に、日本に対して文化を伝授したことがある。今、日本の文化は優秀である。漫画やアニメなど、さまざまな競争力のある文化がある。それを学びましょう。学べばいいのだ」と大統領に答えた。

金大統領は、ものすごく論理的で合理的な人物である。しかし政治家なので、別の要素も判断に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もし選挙が早ければ、その決定はできなかっただろう。なぜならば、国民の世論で八五%以上が「文化開放」に反対しているからである。そういう意味で、選挙直前の政治家はポピュリストになりがちなのである。しかし幸い、選挙は当面行われる予定がなか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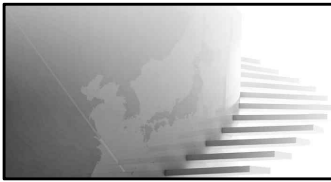
第3章 韓国知識人が提起する歴史和解

そしてこの決断が下された。

結論から言うと、金大中・小渕の「共同宣言」の精神は、歴史条項と文化条項の二つとも、韓日双方にとって大いにプラスに作用した。過去も現在も未来においても、大小のさまざまな争点があればあるだろう。歴史問題に限らない。そのたびに、韓国と日本の指導者は、この「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精神に立ち返り、公式でも、非公式でもとにかく韓日関係者は会う。首脳同士で二年半も会わないとは、とても話にならない事態である。できるだけ合理的に話をすれば、克服できない問題はないのである。

指導者に求められる思慮深さ

最後に強調しておきたいことは、原理的にも現実的にも、国を駄目にするのは国民ではない。歴史を見ると、必ず指導者の誤った判断が国を駄目にするのである。したがって、何か問題が起きるたびに、歴史問題に関しては、可能なかぎり、日本語でいう「賢慮」、思慮深さを堅持し、節制した言葉と行動が必要である。そうすれば、必ずすべての問題は解決に向かうという確信を持つていく。



金大中(キム・デジュン)・小渕宣言19周年記念国際学術会議
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構築

第1セッション 発表

日韓関係の「失われた19年」 を振り返って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その後

木宮正史 (東京大学)

はじめに

- 1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はなんであったのか
 - 2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成立とその条件
 - 3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その後と日韓関係の構造変容
 - 4 日韓関係の構造変容へのもう一つの対応戦略
- おわりに

はじめに

1998年10月8日訪日した韓国金大中大統領は、日本の国会で演説を行い、テレビ中継された。その演説を聞き、筆者は確かに新たな日韓関係の時代の到来を実感した。

“日本は、明治維新で独自の近代化に成功し、西欧の文物を受容して大きな発展を遂げました。しかしながら、当時の日本は帝国主義と戦争の道を選択することにより、日本国民はもとより、韓国を含めたアジア諸国の国民

に大きな犠牲と苦痛を与えました。

しかし、第二次世界大戦後、日本は変わりました。日本国民は汗と涙を流して、議会民主主義の発展と共に、世界が驚く経済成長を遂げました。そしてついに世界第二位の経済大国となった日本は、アジア各国の国民に、無限の可能性と希望の道標を示したのであります。

今の日本は、発展途上国に対する世界最大の経済援助国として、自国の経済力にふさわしい国際的役割を、忠実に履行しています。また、人類史上初めて、原爆の被害を体験した日本国民は、常に平和憲法を守り、非核平和主義の原則を固守してこられました。

かくごとく、戦前の日本と戦後の日本は、実に克明な対照をなしています。私は、戦後の日本国民と指導者たちが注いだ、血のにじむような努力に、深い敬意を表する次第であります¹⁾。”

以上の、戦前の日本と区別して戦後の日本の実績を高く評価する演説は、今まで戦前日本との連続性で戦後日本を見ていた、韓国社会を支配した対日連続史観とは一線を画するものであったからである。金大中大統領は、続いて

“しかしながら、わが韓国を含むアジア各国には、今も日本に対する疑懼と憂慮を捨てきれない人々が大勢います。その理由は、日本自ら過去を正しく認識し、謙虚に反省する決断が足りないと考え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

こうした疑念と不信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日本のためにもアジア各国のためにも、大変不幸なことであると言わざるをえません。反面私は、過去を正しく認識し反省する、道徳的勇気のある、数多くの日本の民主市民がいるということも、よく知っています。”

と、日本との歴史問題に言及することも忘れなかった。ただ、日本の戦前と戦後とを連続的に理解し、その結果、「日本の軍事大国化」を常に警戒した韓国社会の一般的

1) 1998年10月8日の金大中大統領の日本国会における演説の日本語訳に関しては、民団(大韓民国居留民団)のウェブサイト(http://www.mindan.org/shinbun/981014/topic/topic_e.htm)を参照されたい。

な通念とは異なる見方を提示した認識は、少なくとも日本社会にとっては確かに「新鮮」であった。

しかしながら、こうした新たな日韓関係が切り開かれるという予感、それから19年経った現在から見ると、率直に言って裏切られたと言えるのではない。1998年をピークとして日韓関係はその後、紆余曲折を繰り返しながらも、98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当時の良好な関係を回復するには至っていない。その意味で「失われた19年」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本稿では、98年ピークであった日韓関係がなぜ成立したのか、その条件を探る。そのうえで、その後日韓関係のさらなる発展が望めなくなったのはなぜなのか、その原因を、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成立させた条件の変化と関連付けて考察する。最後に、そうした条件の変化に起因して日韓関係のさらなる発展は困難にならざるを得なかったのか、それとも、もう少し違った対応が可能であったのか、今後の双方の戦略も含めて考察する。そうした知的作業によって、19年経過した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歴史の1エピソード」としてしまうのではなく、その現在の意義を再照明する。

1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は何であったのか

1998年10月8日、韓国金大中大統領の訪日とともに発表された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は、どのような点で新たな日韓関係を予感させる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

最も重要な点は、日韓関係を狭義の日韓「間」関係としてだけでなく、第三者や国際社会に向けた「日韓」として位置づける発想が明確に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である。これは、同宣言の至るところに見られる。同宣言の第4項には「両国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単に二国間の次元にとどまらず、アジア太平洋地域更には国際社会全体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また、個人の人権が尊重される豊かな生活と住み良い地球環境を目指す様々な試みにおいて、前進させていく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²⁾という言及がある。さらに、第6項にも「冷戦後の世界において、より

2) 1998年10月8日に発表された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内容については、日本外務省のウェブサイト（http://www.mofa.go.jp/mofaj/kaidan/yojin/arc_98/k_sengen.html）を参照されたい。

平和で安全な国際社会秩序を構築するための国際的努力に対し、日韓両国が互いに協力しつつ積極的に参画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という言及がある。

そして、それを最も象徴的に表すのが第9項である。「両首脳は、国際社会の安全と福祉に対する新たな脅威となりつつある国境を越える地球的規模の諸問題の解決に向けて、両国政府が緊密に協力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両首脳は、地球環境問題に関し、とりわけ温室効果ガス排出抑制、酸性雨対策を始めとする諸問題への対応における協力を強化するために、日韓環境政策対話を進めることとした。また、開発途上国への支援を強化するため、援助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協調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また、両首脳は、日韓逃亡犯罪人引渡条約の締結のための話し合いを開始するとともに、麻薬・覚せい剤対策を始めとする国際組織犯罪対策の分野での協力を一層強化す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というように、地球環境、対途上国援助、犯罪防止などグローバルな問題に関する日韓協力の重要性を相互に認識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

もちろん、こうしたグローバルな問題群に関する日韓協力以外にも、北朝鮮のミサイル開発への対応や、アジア通貨危機に直面した韓国に対する日韓経済協力など、日韓の間の懸案に関する言及はあるし、日韓が共有する歴史に関する言及もある。しかし、そうした既存のメニューに加えて、新たに日韓が協力してグローバルな問題群に立ち向かう姿勢を示したことは、日韓関係の新たな時代を画するものであると期待された³⁾。但し、そうした新たな日韓関係は、やはり日韓の間に横たわる懸案が相当程度解決されるか、もしくは、封印されることによって初めて可能になるものであり、グローバルな問題群への対応それ自体が、そうした懸案の解決や封印を保障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

2.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成立とその条件

では、なぜ、1998年という時点で、こうした日韓関係を画する日韓パートナーシッ

3) 木宮正史「第4章 金大中政権による対北朝鮮包容政策の起源・展開・帰結」五十嵐武士 編『太平洋世界の国際関係(変貌するアメリカ太平洋世界Ⅱ)』彩流社、2005年、pp. 169-205を参照されたい。

プ宣言が成立したのか。日本を熟知しており、また、拉致事件などを通して日本とも関わりの深い金大中大統領という政治指導者の存在を抜きに同宣言を語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金大中大統領は、1929年生まれ、日本語をよく理解する世代である。さらに、韓国外交における日本の重要性を、朴正熙政権に対抗する野党政治家の中では比較的高く評価していた。これは、日韓国交正常化に関する朴正熙政権の姿勢を批判しながらも、日韓国交正常化を通じた日韓の経済協力の必要性は十分に認識していたし、また、71年の大統領選挙における公約の1つである「4 大国不戦保障論」は、それまで韓国においては「タブー視」されてきた朝鮮半島の安全保障に関する日本の役割、関与にも言及したことにも現れた⁴⁾。

そして、何よりも、71年の大統領選挙の敗北後、維新体制下において自由な政治活動が不可能な時期、日本に「亡命」しつつ反政府活動を行っていた最中の73年8月、滞在先の東京ホテルグランドパレスで韓国中央情報部によって拉致され韓国に「送還」されるという、金大中拉致事件が起こった。この事件は、翌74年8月の在日韓国人文世光による大統領狙撃事件と共に、日韓政府間で「政治決着」された⁵⁾。しかし、この事件によって、金大中は韓国民主化のシンボルとして日本社会に受け入れられ、事件の真相を究明し日韓両政府の「政治決着」を批判し、韓国の民主化を指向する日韓連帯運動が登場した⁶⁾。さらに、80年全斗煥ら新軍部勢力によって「内乱煽動」罪に問われ死刑判決を受けた時も、日本では金大中に対する救命運動が相当程度盛り上がりを見せた⁷⁾。

このように、金大中にとっては、日本政府は、一方で、朴正熙政権と結託して自らに対する拉致事件の法的責任をうやむやにした批判対象であったが、他方で、日本国内には、自らを支援し救命運動を展開してくれた人も多数存在した。日本という国は、こうした二面性を持つ対象であった。「私は、私の生命と安全を守って下さるため、長い期間にわたって努力を惜しまれなかった日本国民と言論、そして日本政府のご恩を、決して忘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本日、このように、日本国民を代表される議員の皆様、感謝の意を表する機会を得まして、私は長年の宿願をかなえたようで、この

4) 木宮正史「若き金大中の外交構想」李鍾元・木宮正史・磯崎典世・浅羽祐樹『戦後日韓関係史』有斐閣、2017年、pp. 130-131。

5) 김은경「냉전 변용기의 한일관계의 전개 : 김대중 납치사건과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을 중심으로」『일본공간』7호, 2010년, pp.148-182.

6) 青地晨・和田春樹 編『日韓連帯の思想と行動』現代評論社、1977年。

7) 韓国の民主化運動を考える日本人の会編『金大中氏を殺すな!』晩聲社、1980年。

上ない喜びに浸っております。日本国民の皆様には厚くお礼を申し上げます」という国会演説でも表現された。

日本の小渕恵三首相も、田中(角栄)派の系譜を受け継ぐ政治家であり、それ以前の非自民連立政権の細川護熙首相(日本新党)や自社さ連立政権の村山富市首相(社会党)ほどではもちろんないが、それ以後の福田(赳夫)派の系譜を受け継ぐ森喜朗・小泉純一郎・安倍晋三という清和会主導の政権と比べると、歴史認識問題などに関しては比較的にリベラルな指向を持っていた⁸⁾。こうした日韓の政治指導者の個性が「小渕総理大臣は、今世紀の日韓両国関係を回顧し、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と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た。金大中大統領は、かかる小渕総理大臣の歴史認識の表明を真摯に受けとめ、これを評価すると同時に、両国が過去の不幸な歴史を乗り越えて和解と善隣友好協力に基づいた未来志向的な関係を発展させるためにお互いに努力することが時代の要請である旨表明した」という歴史問題に関する日韓の「共鳴」を帰結させた。

しかし、同宣言は、日韓の政治個性という偶然的な要因にだけ起因するものではなく、以下のような日韓それぞれの必要性が介在した。

第1に、アジア通貨危機に直面した韓国としては、危機から脱却するためには日本の経済協力が必須であったという韓国側の事情が強く作用した。共同宣言における「金大中大統領は、日本によるこれまでの金融、投資、技術移転等の多岐にわたる対韓国経済支援を評価するとともに、韓国の抱える経済的諸問題の解決に向けた努力を説明した。小渕総理大臣は、日本経済再生のための諸施策及びアジア経済の困難の克服のために日本が行っている経済支援につき説明を行うとともに、韓国による経済困難の克服に向けた努力を引き続き支持するとの意向を表明した。両首脳は、財政投融资を適切に活用した韓国に対する日本輸出入銀行による融資について基本的合意に達したことを歓迎した」という合意に反映された。第2に、今度は日本側としては、ちょうど98年8月にあった北朝鮮が発射実験したテポドンミサイルが日本列島を飛び越えて太平洋側に着水したことの衝撃が大きく、そうした北朝鮮のミサイル開発という安全保障上の

8) 但し、福田赳夫自身は外交政策に関しては相当にリベラルな指向を持っていた。この点は福田の回顧録を参照されたい。福田赳夫『回想九十年』岩波書店、1995年。

危機に金大中政権と協力する必要を強く意識したためでもあった。

但し、協力の強い意思を持つ指導者の存在、それぞれの相互協力の必要性の認識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だけでは日韓協力の必要条件ではあるが、十分条件ではない。こうした日韓協力の制度化の背景には、冷戦期および脱冷戦期に進行した日韓関係の構造に関する以下のような変容が存在した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次の4つの構造変容が作用したと考えられる⁹⁾。

第1に、日韓の水平化である。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以後の日韓協力は、基本的に、日本がODAなどの開発協力によって、韓国の経済発展を支援するという性格のものであり、韓国に対する日本の優位が前提とされた。そうした政策が奏功して、韓国は持続的な経済発展を達成し、次第に、韓国経済の規模や水準が日本に匹敵するようになり、垂直的な関係から水平的な関係へと変容していったのである。80年代までは、韓国の対日貿易赤字などに起因して「韓国経済は日本経済に従属している」という言説が日韓を横断して少なからず影響力を持ったが¹⁰⁾、90年代以降、こうした見方はすっかり影を潜めるようになった。また、外交的にも、日本が90年代以降、頻繁な政権交代などで、その経済力に比して外交的存在感を誇示できなかったのに対して、韓国は大統領制の下、さらに金大中という世界的な存在感を持つ指導者の下で、その国力以上の外交的存在感を誇示した。このように外交力においては、韓国が日本に優るとも劣らぬパワーをもつようになった。

第2に、民主主義と市場経済という政治経済の基本的な価値観を日韓が共有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日韓の政治体制の均質化である。同宣言の第3項における「小渕総理大臣は、韓国がその国民のたゆまざる努力により、飛躍的な発展と民主化を達成し、繁栄し成熟した民主主義国家に成長したことに敬意を表した。金大中大統領は、戦後の日本の平和憲法の下での専守防衛及び非核三原則を始めとする安全保障政策並びに世界経済及び開発途上国に対する経済支援等、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対し日本が果たしてきた役割を高く評価した。両首脳は、日韓両国が、自由・民主主義、市場

9) こうした日韓関係の構造変容に関しては以下の論文を参照されたい。木宮正史「序論 構造変容し漂流する日韓関係」木宮正史・李元徳編『日韓関係史 1965—2015 I 政治』東京大学出版会、2015年、pp.1-11。기미야 다다시「기로에 선 한일관계: 마찰을 넘어 '진화'를 향해」『일본공간』12号, 2012年, pp.87-100。

10) 日本側のこうした見方を代表するのは、隅谷三喜男『韓国の経済』岩波新書、1976年。

経済という普遍的理念に立脚した協力関係を、両国国民間の広範な交流と相互理解に基づいて今後更に発展させていくとの決意を表明した」という文言には、こうした相互認識が顕著に反映されていた。

第3に、政治経済中心、政府間財界間関係主導の日韓関係から、社会文化など多様な領域を含み、地方政府や市民社会間関係なども含めた多層的な関係という変容である。日韓の活発な文化交流、文化の相互浸透という現象はまだ本格化してはいなかったが、ちょうど、金大中政権による対日文化開放政策は、そのきっかけとなる重要な政策転換であった。対日文化開放政策は従来非公式的に進行していた日本文化の韓国への浸透を公式化しただけではなかった。逆に「韓流」という韓国文化の対日浸透を本格化するきっかけとなった。それまでの文化的な「保護主義」を捨てて経済のみならず文化の国際競争力を育成することを指向したからである。

また、冷戦期、韓国の権威主義体制下では、日本の市民社会との交流は、韓国社会が忌避するべき「左翼思想」が韓国社会を汚染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危機に基づき、実質的に禁止されていたが、脱冷戦期、韓国が民主化されることで、日韓の市民社会間の交流は、いろいろな領域、次元において非常に活発になった¹¹⁾。このことも、同宣言の第4項「両首脳は、両国間の関係を、政治、安全保障、経済及び人的・文化交流の幅広い分野において均衡のとれたより高次元の協力関係に発展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では関係の多様化に関する言及があり、第10項では「両首脳は、以上の諸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協力を効果的に進めていく上での基礎は、政府間交流にとどまらない両国国民の深い相互理解と多様な交流にあるとの認識の下で、両国間の文化・人的交流を拡充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と日韓関係の多層化にも言及された。

第4に、日韓関係の双方化である。日本に対する韓国の関心が韓国に対する日本の関心よりも圧倒的に高く、したがって、価値、情報などが常に日本から韓国へ一方的に流れていた状況が、双方の関心が相対的に均衡化することによって、価値や情報などの流れが日本から韓国へと流れるばかりでなく、それと均衡のとれた形で韓国から日本にも流れるという意味で、双方向化という構造変容が次第に定着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

11) 기미야 다다시「한일시민사회의 관계 구축을 위한 조건」하영선 편『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 인식』나남, 1997년, pp.229-264.

である。

それ以前は、日韓関係に対して日本よりも韓国の方が関心が高かった。しかし、1998年の金大中大統領の訪日に伴う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関しては、韓国において関心が高かったのはもちろん、日本においても非常に高い関心が寄せられた。

こうした4つの側面における日韓関係の構造変容は、総合すると、「非対称で相互補完的な」日韓関係を「対称で相互協力的な」日韓関係へと変容するのに寄与した¹²⁾。それが1998年の時点における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一旦は結実したのである。

3.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その後と日韓関係の構造変容

しかし、1998年以後の日韓関係は、こうした新たな日韓関係が定着し制度化するのに成功したとは言い難い。図1は日本内閣府による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から日韓関係に関わるものを抽出したものである。98年が韓国への好感度や日韓関係の良好度に関する認識において必ずしもピークというわけではないが、にもかかわらず、それまでは比較的安定的に韓国への好感度が増大していたのに対して、98年以降は現実の日韓関係の良好度に関する認識推移に対応する形で、韓国への好感度の増減幅が大きくなり、特に、2012年以降は、韓国への好感度、日韓関係の良好度認識、いずれの数値も激減している。韓国の世論調査に関しては、こうした時系列的な調査が存在しないが、韓国の場合は、元来対日好感度は日本のそれに比べると高くはないので、それほど増減幅が大きいわけではないが、同宣言のインパクトは、日本における評価ほど韓国では高くはない。それだけ韓国社会の対日観には厳しいものがあり、一過性の出来事などに起因して好転す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その意味で、日韓においても、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のインパクトはそれほど持続性を持つわけではなかった。

そのような韓国社会の厳しい対日観を前提とすると、同宣言の持つインパクトが限定的であるのは当然ではないか、したがって、同宣言をそれほど画期的なものであると見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ここで問題となるのは、1998年の同宣言をピークとして悪化した日韓関係が持続したのは、同宣言を成立させた条件が変容したからであ

12) 木宮正史「第11章 日韓関係：非対称的な相互補完から対称的な競合へ」大矢根聡・大西裕編著『FTA・TPPの政治学 貿易自由化と安全保障・社会保障』有斐閣、2016年、pp.251-271.

るのかという点である。そうした条件が存在したから同宣言が成立したが、そうした条件がなくなったり弱くなったりしたので、良好な日韓関係が持続しなくなったのかという点である。

1998年以後、大体、2000年代半ばくらいから日韓関係は悪化し始めた。韓国における金大中政権から盧武鉉政権への交代、日本における小泉政権、安倍政権の登場という政権の担い手、政治指導者の交代というのが重要な変化の要因であった。盧武鉉政権は、金大中政権と同じ「進歩」政権ではあったが、日本を熟知していた金大中大統領とは異なり、盧武鉉政権には日本とのパイプを持っていなかった。対北朝鮮政策をめぐって日本と協力する意欲を持っていたが、その利用方法がわからなかったというか、外交的に稚拙であった。他方で日本では、小渕政権以後、同じ自民政権の森、小泉、安倍、福田、麻生政権が続いたが、特に安倍政権以後は1年ほどの短命内閣であった。しかも少なくとも歴史問題に対しては小渕政権ほどリベラルではなかった。このように、同宣言以後の日韓関係は、それを維持し支える強い意志と政治力を持つ政治指導者や政権に恵まれなかった。

また、何よりも、ブッシュ共和党政権の登場とクリントン政権とは異なる対北朝鮮強硬論の台頭が、北朝鮮の核開発が露呈することによって、対北朝鮮政策をめぐり日米韓の共同歩調と協力を困難にした。その結果、金大中・盧武鉉政権の韓国の対北朝鮮政策が孤立してしまった。特に、金大中、盧武鉉政権にとって、2002年と2004年の2度にわたって訪朝し、日朝国交正常化への意欲を示した小泉純一郎政権と対北朝鮮政策に関する共同歩調と協力を期待した。したがって、たとえ小泉首相が現職首相として靖国神社に参拝したとしても、それに対する批判を自制した。しかし、日本の対北朝鮮政策が、小泉第1次訪朝時に明らかになった日本人拉致問題に起因して強硬論が台頭することで、小泉首相の意欲にもかかわらず、日朝関係は停滞し悪化した。韓国盧武鉉政権は、対北朝鮮政策をめぐり日韓協力に期待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中、小泉首相の靖国神社参拝などに起因する歴史問題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と共に、日韓間に恒常的に存在していた領土問題を歴史問題と連関させることで、「外交戦争も辞さず」という対日強硬論に舵を切ったのである¹³⁾。

13) 기미야 다다시「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일관계」『일본공간』창간호, 2007년, pp.162-185.

また、アジア通貨危機への対応のための日韓協力に関しても、金大中政権の下でいち早く危機を脱することに成功したために、経済協力の必要性のために対日関係を悪化させないように配慮する必要がなくなったことも、盧武鉉政権の「外交戦争も辞さず」という対日強硬論への旋回を促進した。

以上のように考えると、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成立させた条件は一定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政治指導者の交代や北朝鮮問題や韓国の経済問題の状況が日韓協力の必要性を低下もしくは困難にすることで日韓関係は悪化したわけであり、結果的に見ると、日韓関係の構造変容自体は、日韓関係を良好なものにもするし悪化させも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日韓関係の構造自体が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成立させる条件を提供したことは確かであるが、それをピークとした後の日韓関係の悪化は、日韓関係の構造変容とは無関係に起こ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のか。果たして、そのような理解で妥当なのか。

日韓関係の構造変容が当然の帰結として日韓関係が悪化したわけではない。しかし、同宣言以後の日韓関係の悪化が、日韓関係の構造変容とは無関係であったわけでもない。構造変容への対応における違いが、帰結における違いに影響を及ぼしたと考えるべきだろう。

第1に、水平化への対応である。一方で、そうしたパワーシフトに応じた力関係の変化を共に受け入れることで、対等な立場から相互に尊重するという姿勢に移行することは可能である。しかし、他方で、そうしたパワーシフトへの対応として、相対的強者はそれを認めず打ち消そうとする行動を選択する傾向にあり、相対的弱者はそれに便乗することでより一層自己主張を強める傾向にある。その結果、水平化が相互の立場を理解し尊重するという方向に向かわせるのではなく、むしろ逆に相互の競争関係を、自己主張だけを強める形で展開する方向に向かわせる場合もある。同宣言以後の日韓関係を見ると、垂直的な日韓関係の水平化が、前者ではなく後者の方向に強く作用し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それ以前の垂直的な関係の下では、弱者である韓国が強者である日本の協力を仰がなければならない事情もあり、また、日本は韓国との競争意識よりも、冷戦体制下、南北分断体制下での韓国優位の構造を定着させるためにも韓国への協力を優先させることの方を重要だと考えたために、韓国に対しては相当に「寛容な姿勢」を示してきたとい

う自覚を持つ。そうした日韓の非対称性が日韓の相互補完関係を成立させてきた。しかし、水平化は、日本からすると、韓国に対する競争意識が芽生え、いつまでも韓国の主張に寛容に対応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意識を強めることになる。そして、韓国に対して、ある意味では「先進国」らしい洗練した節度のある対応を求めることになる。しかも、それが充足されない場合には「韓国の反日は変わらない」という失望感を隠さない。それに対して、韓国は、過去の垂直的な関係の下では、「正義」という価値観に基づいた韓国の主張を十分に貫徹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関係が水平化するのに伴い、そうした主張をより十全な形で貫徹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し、そうするのが当然だという意識が強くなる。しかも、そうした韓国の主張に対して、従来は寛容な姿勢を示した日本が、何か不寛容な姿勢に転換したように見えることによって、どうも、「自らが変わった」のではなく「相手(日本)の対応が変わった」ように映ることになる。結果として、日韓は対称な関係の下で相互競争意識をより一層激化させることになる。

第2に均質化への対応である。韓国の持続的発展と民主化に伴い、市場経済と民主主義という基本的価値観を日韓が共有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認識を日韓が共有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そもそも、そうした価値観の解釈が日韓の間で全く同じであるという保証はない。その最も象徴的な事例は、民主主義という価値観をめぐる問題である。日本では、どちらかという、民主主義はあくまで決定に至る手続きであるという認識が強く、その決定によってどのような実質的な価値が実現されるべきであるのかという問題認識はそれほど強くはない。したがって、国家間関係で言えば、「一度結んだ約束は守るべきだ」というような規範は当然視される。それに対して、韓国では、そうした決定に至る手続きだけが重要であるわけではなく、むしろ、その決定の結果、どのような実質的な価値が実現されるのかが問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傾向にある。この点は、例えば、1987年の民主化や、2017年の朴槿恵大統領の弾劾などにも顕著に表れた。そして、国家間関係においても、「正義に反した約束は覆されるべきであり、正義が体現された新たな約束が締結されるべきだ」ということになる。

日韓間で現在も懸案となっている、日本の植民地支配に起因した被害に対する補償、具体的には、慰安婦問題や徴用工問題などに関して、日本政府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法的には解決済みであるという立場を譲る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

る。それを前提とした補完的措置は可能であるが、ともかくそうした法的な立場を揺るがすことは「法の支配」に反することになると考える。それに対して、韓国政府や社会では、そもそも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それ自体が、垂直的で非対称な日韓関係の下で「合意」された、何よりも被害者の人権への配慮を欠いたものであり、「正義」や「普遍的人権」の名の下に認められ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意識が強い。そもそも日本の植民地支配自体が「国際法違反」であり、「正義にかなったものではない」。したがって、たとえ一旦締結されたとは言え、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は批判的に再検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こうした日韓の違いは、「法」や「人権」「民主主義」という本来であれば共有する価値観に関する相互不信を助長す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日本から見ると、「韓国とは本当に基本的価値観を共有すると言えるのか」という批判が生まれることになるし、韓国から見ると「歴史を反省しない日本とは、歴史観という根本のところで価値観を異に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を生むことになる。その結果、基本的な価値観の共有自体を相互に疑問視させ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第3に、多様化多層化への対応である。同宣言は、ある意味ではそうした多様化多層化した日韓関係を政府が主導してまとめ上げる形で成立したものである。しかし、こうした多様化多層化した関係を政府主導でまとめあげる妥協を導き出すことは限界がつきまとうものである。例えば、日韓FTA交渉に関しても、結局、政府がそれぞれの社会の諸利益を調整統合して締結に持って行くことはできなかった。また、慰安婦問題に関しても、1990年代のアジア女性基金の活動や2015年末の政府間合意が、日韓双方の社会、特に、当該問題に関しては、明確な拒否勢力を抱える韓国社会において、それ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のは、多様化多層化した関係の中で、妥協を導出することがいかに困難であるのかを示すものであった。

第4に、双方向化への対応である。冷戦期、日韓関係に関しては韓国の関心だけが相対的に高い状況では、日韓間の対立が生じて、韓国では政府が主導して国内の不満を抑えると共に、日本ではそれが外交問題化せずに政府による裁量によって妥協的な姿勢を示すことで、日韓間の対立はエスカレートすることを抑えることができた。関心や情報における非対称性がある意味ではそれを可能にしたのである。しかし、韓国の民主化と共に、政府主導の妥協は限界に直面するだけでなく、そうした民意を利用する必要も生じることになり、韓国国内においては、日本との懸案に関しては妥協が困難に

なる。さらに、日本の対応に関しても、もはや日本社会も無関心ではいられなくなり、韓国の対応に寛大に対応するよりも、韓国の対応にさらに対抗するような強硬論が世論においても形成されるようになる。それだけ韓国の対応に関して日本社会における敏感さが高まるからである。そうした相互の敏感さを前提とすると、日韓両政府が社会の異論を抑えて妥協を導出することは相当な困難さを伴うことになる。しかも、問題をより一層複雑にするのは、そうした双方向化の中で、対立をエスカレートさせているのは、自らではなく相手の責任であるという認識を日韓共に共有するようになるからである。脱冷戦期において、慰安婦問題や歴史問題という日韓に恒常的に存在した問題がなぜ、それから四半世紀以上経過した時点でも、なおも先鋭化し続けるのか、この背景には、こうした双方向化された日韓関係が存在する。

4. 日韓関係の構造変容へのもう一つの対応戦略

こうした日韓関係は、構造変容の当然な帰結であるのか。そうではないだろう。日韓関係の構造変容に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かというのは選択の問題であり、当然の帰結というわけではない。そうした構造変容をどのように認識し、それを前提としてどのような選択肢を設定し、そうした選択肢の中でそのような選択をするのかという問題である。

第1に、水平化への対応に関して、前述したような相互主張を強化するだけではない対応は可能ではないか。相互に主張を強化し競争を激化するだけでは、その結果獲得し得る利得はゼロサム的であり、しかも、絶対利得としてもそれほど大きくはない。相互に競争意識を持つことで、競争相手よりも自分がどれだけ得をするのかという相対的利得に意識が行きやすいのはやむを得ないことである。しかし、その結果、得られる利得が絶対的にそれほど大きくはない状況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特に第三者との関係を念頭に置くと、それほど賢明な選択であるとは言い難い。むしろ、第三者との関係を念頭に置いて、日韓が可能な部分では協力を深化することによって、相互の絶対利得を増大させるという選択をした方が賢明な場合が多々あるのではないか。特に、大国化する中国への対応、不透明なトランプ政権を抱える同盟国アメリカとの同盟管理、そして

何よりも核ミサイル開発に邁進して軍事的挑発を強め軍事的緊張を高める北朝鮮への対応を念頭に置くと、日韓は協力することによって相互の利益を増大させるという選択を採用した方がはるかに賢明な選択である。

文在寅政権に対して、日本では、「反米・反日・親中・親北朝鮮」の「左派」政権であるという、かなり実態とは乖離した警戒を込めた懸念が、成立前から提起されていた。しかし、実際に、文在寅政権の外交政策はそうしたものではなく、たとえ、慰安婦問題や歴史問題などで日本に対して厳しい姿勢で臨んでいるとしても、それとは別に北朝鮮問題に関しては日米韓協力を重視する姿勢を示している。また、安倍政権にしても、同様である。少なくとも、現状では、日韓共に、北朝鮮問題に関しては、協力姿勢を堅持する。こうした発想は、たとえ、日韓関係が水平化して競争意識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しても、堅持するべき姿勢である。

第2に、均質化への対応に関しても、もう少し、共通の価値観に関する自らの解釈だけを絶対化して相手を批判するのではなく、相互に相手の解釈を理解したうえで、その乖離を接近させる対応は可能ではないか。確かに、日韓の乖離だけに目を向けると日韓の間には相当な距離があ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しかし、これも、第三者を念頭に置いて日韓の距離感を意識した時、逆に日韓の均質性がより一層強く意識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中国という価値観を異にする大国を念頭に置けば、明らかに日韓は価値観においても規模においても共通性が強調されるはずである。韓国では日中との距離感に関して相対的に中国に近いという意識が少なからず存在す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これは、中韓との距離感に関する日本の立場とは対照的である。中韓を念頭に置けば中国よりも韓国の方を近いとみる日本に対して、韓国では、むしろ日本よりも中国の方に親近感を感じる人が相対的に多い。しかし、これは、それほど固定的ではないはずである。特に、韓国の対中観は、ここ1年くらいのTHAAD配備をめぐる中韓の緊張などに起因して相当に流動的であり、韓国社会の対日観には依然として厳しいものがあるとしても、中国との比較を念頭に置いた時、韓国社会の対日観は相対的には可変的である。共通の価値観の解釈をめぐる日韓の乖離は埋められないと諦める必要はない。

慰安婦問題や徴用工問題などに関する日韓の乖離にしても、韓国は「一旦結んだ約束を守ろうとせず」「すぐにゴールポストを動かそうとする」と、韓国を「諦めてしまう」のではなく、なぜ、韓国がそうした主張をするのか、日本はそれを理解する必要があ

る。韓国にしても、ただ、正義に反しているから古い約束は破棄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古い約束に基づきながらもそれに手を加えることによって結果としては正義を実現することと同じ結果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ような、結果のみならず手続きを重視した姿勢を模索するべきではないか。そうすれば、日本としてもそれに応えることはある程度可能になるはずである。このように、自らの論理だけが正しいということにこだわるのではなく、相互の論理の違いを理解しつつ、それを調整し両立に近い結果をもたらすことを考えることはできるのではないか。

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韓政府間合意も、そうした試みの一環であったと評価するが、それは、韓国国内の政治状況によって相応の評価を受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ただ、そうであれば、それをさらに韓国国内の評価を受けうるように修正するという作業はそれほど困難ではないはずである。実際に、日韓は、65年の日韓基本条約や日韓請求権協定に関しても、それを破棄して新たなものにすることではなく、日韓関係を取り巻く条件の変化に対応して不断にそれを修正する作業に実質的に取り組んできたのではないか。そうした作業を経ることによって65年の日韓基本条約や日韓請求権協定は持続してきたのである¹⁴⁾。今までは可能であったことが今になって不可能になったという特段の事情はないはずである。日韓関係の双方向化によって日本に対する韓国の世論のみならず、韓国に対する日本の世論もより一段と厳しさを増す状況は存在する。にもかかわらず、今まで行ってきた知的かつ政治的作業を今になってできなくなったという決定的な条件変化はないはずである。

第3に、多様化多層化に関しても、少なくとも関係悪化の悪循環が領域を跨がって、もしくは複数の層を跨がって連携していくことを防ぐことはできるのではないか。関係改善の好循環を連携させていき、悪循環の連携を断ち切るということができれば理想的であるが、それほど都合よくは行かない。しかし、悪循環を脱連携することはある程度自覚的に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である。この点、最近興味深いのは、以前は、日韓間で緊張が高まれば、韓国の方が複数の領域や層を連携させて緊張度を高めることが多かったが、最近では、韓国の方が連携を自制しているように思う。むしろ、日本の方が連携していることが多いのではないか。最も象徴的な事例が、日韓関係が悪化した後、

14) 기미야 다다시『한일외교협력의 궤적과 그 함의』이원덕, 기미야 다다시 편저『한일관계사 1965-2015 1 정치』역사공간, 2015년, pp.57-86.

韓国人の訪日はむしろ増大しているのに対して、日本人の訪韓はかなり減っている点である。もちろん、日本人の訪韓者数の減少が日韓関係の悪化に起因するのではなく、韓国の観光資源の貧弱さにあるという側面もあるだろうが、ともかく、韓国の訪日者数の増加と日本の訪韓者数の減少というのは非常に対照的である。

第4に、双方向化に関して、日韓関係の悪化をもたらしたのは、日韓双方の社会が相互に刺激し合いながら、関係悪化の責任を相手に帰してきたことが作用する。これだけ交流が密になる双方向化の状況で、一旦、関係悪化の悪循環が始まってしまうと、それが双方の社会の相手に対する強硬論を刺激しやすいことは否定できない。しかし、こうした双方向化は、デメリットだけではなくメリットも提供する。それは、双方にとって相手の重要性を意識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それが関心の高まりにもつながっているわけである。双方の社会にとって必要で適切な情報を選択することで、双方向化に伴う関係悪化のエスカレーションをある程度抑制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である。特に、こうした双方向化の下では、日韓関係を相互にとっていかに戦略的に利用するのかという可能性を切り開くことにもなるはずである。

以上のように、日韓関係の構造変容によって日韓関係は非対称な相互補完関係から対称な相互競争関係へと変容しつつあるのだが、そうした競争を対立にまでエスカレートしやすい関係ではなく、協力を通じた競争関係へと転換することができる選択を採用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はず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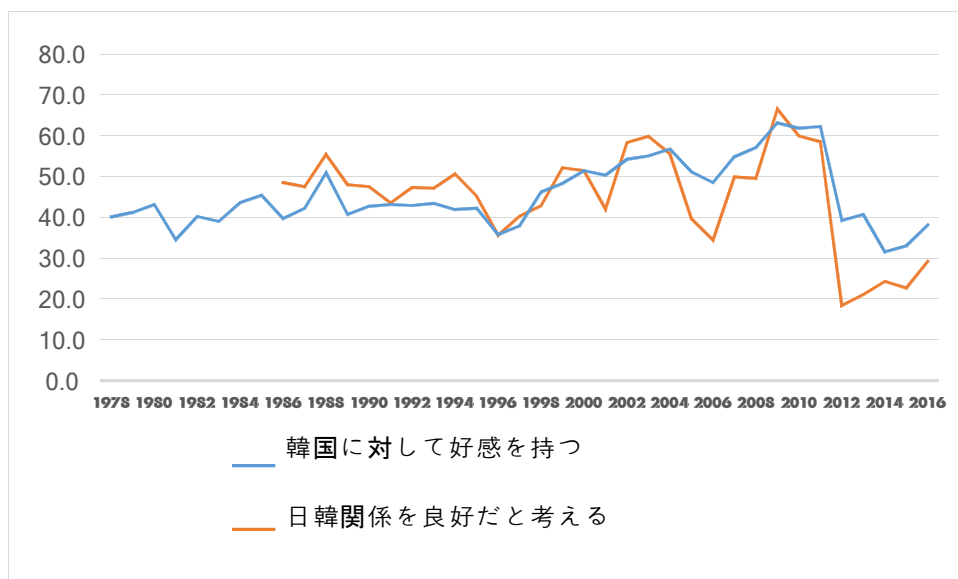
最後に

こうした選択は、日韓関係の現状を考えると、一見ハードルが高いと感じ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同宣言は、そうした選択が可能であったことを示したものである。実際に同宣言の前提となる事実認識には、こうした日韓関係の構造変容を意識した部分が顕著に見られるからである。その意味で、同宣言は、当時の日韓の賢知を集めた成果でもあった。

さらに、そうした選択を可能にするのに必要な具体的な条件を示すのが、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共に採択された日韓行動計画である。日韓間の緊張が高まり日韓

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が「忘却」されるのに伴って、この行動計画も「忘却」されてしまった感がある。しかし、この行動計画は、同宣言を前提にして初めて実現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はずである。そうではなく、むしろ、同宣言に現れた日韓関係を構築するために必要な条件を示したものである。その意味で、同宣言が「死文化」されたので行動計画も「死文化」されたものではなく、こうした行動計画が示す行動を積み上げ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今一度、行動計画を見てみると、現状でも採用できるものが多いし、実際に実績を積み重ねたものも見られる。こうした行動計画を再評価し、それを積み上げていくことが、日韓関係の構造変容に対して、現状での対応ではなく、もう少し別のもう一つの可能性のある対応を示すものではないか。

図1 韓国への好感度と日韓関係の良好度に関する日本世論の推移



第1セッション 討論1

イ・ホチョル (仁川大学中国研究所所長)

はじめに

- ・ 今日、1998年10月に金大中大統領と小渕恵三首相の間で取り交わされた「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19周年を迎え、金大中図書館で日韓関係に関する会議が開かれることになったのは、非常に意義深いことだと思う。
- ・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は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の礎となる歴史的な転機であり、「歴史を直視し、未来に向けた相互尊重や共同協力」の精神はいつまでも受け継がれ、実践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

木宮正史所長は

- ・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が成立した条件を検討し、こうした条件の観点から現在のギクシャクする日韓関係の原因を分析し解決方法を示す。
- ・ 極めて客観的かつバランスの取れた分析や結論を示す。
- ・ 木宮所長は「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が成立した条件を次のように示す:
政治指導者の意志
相互協力の必要性
+
4つの構造変容
水平化、均質化、双方向化、多様化・多層化
- ・ 木宮所長は上記の4つの構造変容という条件が「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可能にしたが、その一方で日韓関係の修復や妥協を難しくする条件で働くともいう。
- ・ つまり、相互競争、自己主張の強化、相互の敏感さの高まりで妥協や調整が難しい。

- それにもかかわらず、4つの構造変容の条件は相互理解を深め、共同の絶対利得を追求し、相互尊重や相互協力の契機に転換できるという点を強調しており、討論者も全くその通りだと思う。
- 特に、台頭する中国への対応+米国との同盟管理+核ミサイル開発を進める北朝鮮への対応という共同協力の領域を示す。

論評

- 韓国外交の構築において日韓関係は一つの軸となり、友好協力の日韓関係は極めて重要だ。
- とりわけ、日米韓協力による北朝鮮の核ミサイル挑発への共同対応は、現在の緊迫した状況の中では喫緊の課題となる。
- 木宮所長が示した4つの構造変容の条件は、日韓間の歴史問題における妥協を導き出すことを難しくする要因として働くのは確かだが、
- より根本的に、どんな形で妥協す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を巡る異見が相次いでいるのが問題の本質だ。
- 新しい財団を立ち上げ慰労金を支給する「手続き上の妥協」を超えて、心から謝罪し和解を模索するいわゆる「感性の合意」が求められる。
- 安倍内閣では、特にこうしたアプローチが不足している。
- 両国の政府、学界、マスコミでは、こうした両国間の「感性の合意」に向け積極的に取り組む必要がある。
-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19周年を迎え、改めて「歴史を直視し、未来に向けた相互尊重や共同協力」の精神は強調され実践されるべきだ。

第1セッション 討論2

保守・進歩政権下の日韓関係 一違いを乗り越え共通利益の確認を一

峯岸博 (日本経済新聞ソウル支局長)

現状／文在寅政権発足 (17.5) 自民党総裁任期を「連続3期9年まで」に変更 (17.3)

〈慰安婦問題〉

文在寅) 2015年の日韓合意は国民の大多数が情緒的に受け入れられない

安倍) 全体の日韓関係に悪影響を及ぼさないよう適切に管理するのが共通利益

〈徴用工問題〉

文在寅) 個人の損害賠償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の立場を表明

安倍) 個人の請求権を含めて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

文在寅) 請求権協定で解決しており、韓国政府が補償もした

〈日韓間の火種〉

- ・ 日韓慰安婦合意めぐり韓国外務省タスクフォースの報告書 (年末)
- ・ 徴用工をめぐる大法院の判決 (康京和外相「判決を尊重する」)

1 . 9年ぶりの進歩政権の対日政策を見極め

- ① 振れの大きい文大統領の対日発言に戸惑い／慰安婦合意や盧武鉉政権時代の悪夢
- ② 日本にあきらめムード、事態を動かす意思なし／当面は対中関係に注力

2. 北朝鮮問題で日韓に共通利益

- ① ICBM、核実験で韓国が日米に接近／「トランプ・安倍」で文在寅をつなぎ留め
- ② THAADめぐり中韓関係悪化、南北対話も進まず→韓国が「日米韓」回帰へ

3. 対立から「適切な管理」へ

- ① 安倍政権、歴史や領土で深入りせず 少女像でも事を荒立てず
- ② 今後、北朝鮮情勢が危機になっても対話に向かっても日韓連携の重要性は増す

4. 日韓関係の「レッドライン」

- ① 慰安婦合意の検証結果、徴用工裁判の判決後の文在寅政権の対応が焦点に
- ② 日本で「韓国離れ」、韓国で合意破棄が高まる懸念、抑制的な対応ができるか

5. 2018年が重要な年に

- ① 平昌冬季五輪、シャトル外交、日韓共同宣言20周年、韓国統一地方選挙
- ② 韓国はツートラック、日本はワントラック「違い」を知る努力／若者の声反映を

第1セッション 討論3

「日韓共同宣言-21 世紀に向けた 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から見た文在寅政権の日韓関係

梁起豪(ヤン・ギホ) (聖公会大学教授)

革新政権と保守政権、市民パワーとエスタブリッシュメント(支配階層)、中国・北朝鮮に対するそれぞれの認識の違いなどから、文在寅政権と安倍政権はかなり異質な関係といわれてきた。今年の大統領選で全ての立候補者が公約に掲げたものだが、朴槿恵政権当時の2015年12月に締結された慰安婦問題日韓合意を否定し、再交渉を求めた文在寅大統領に対して、日本の政府とメディアでは警戒感を強めている。日本の首相官邸だけでなく、世論や市民社会、日韓関係の専門家などに至るまで、強い反発や不信を抱いていることは否め難い。

文在寅政権における日韓関係は、あまり好ましくない外交のレガシー(遺産)の蓄積、お互いへの否定的な認識など、前途多難なスタートだった。韓国の大統領府と日本の総理官邸間の対話や意思疎通、そして日韓外交当局間のパートナーシップや戦略的利益の共有、パイプを通じた活発な人的交流、市民社会間の相互信頼などが欠如している状態だった。文在寅大統領を支持する政治家や学会専門家、メディア関係者、官僚の中で、日韓関係に詳しいシンクタンクなどは少ない上、安倍政権下でも日韓関係を積極的に支持するグループなどはあまり見られないのが実情だ。

2000年代に入り、金大中政権時代の短期間を除くと、ずっと日韓関係の対立や摩擦が続き、いわゆる「複雑骨折」状態と指摘されて久しい。冷戦終結後、ナショナリズムの台頭、2005年の日中間の経済の勢力図の変化、米中G2体制の対立構図の固定化、韓

国の成長と中国への傾斜、日韓間における戦略的共同利益の弱体化、日本の景気低迷と右傾化などがその背景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戦後世代の登場、日韓の特殊な関係論ではなくグローバルな視点の拡散、政治家の内政重視、日本・韓国バッシング(叩き)に便乗するポピュリズムなどが広がってきている。

文在寅政権における日韓関係は相対的に厳しい環境からスタート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両国政府は相手国の立場を配慮し、批判や挑発的な言動を慎みながら、朴槿恵前政権の失敗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努力を重ねている。文在寅当選者の迅速な日本への特使派遣、日韓の主要な政治家の相互訪問、7月7日にドイツ・ハンブルクで開催されたG20サミットにおける日韓首脳会談や日米韓首脳会議の開催など、両国関係は緊張が続く中でも協力の道を模索している。日韓首脳会談は35分間という短い時間だったが、シャトル外交の再開、歴史認識などに関する意見交換を行い、文在寅-安倍間の対話と協力の可能性が確認された。

これは、北朝鮮による核実験や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発射実験の脅威に日韓両国が共感しているからだといえる。今年8月に発表された2017年版日本の防衛白書では、北朝鮮について「新たな段階の深刻かつ差し迫った脅威」と明記されるほど、朝鮮半島における危機的状況はさらに高まっている。北朝鮮政権が核とミサイルを利用した「ゲームチェンジャー」として登場し、北東アジアにおける安全保障の構図は以前とは全く異なる新しい局面を迎えつつある。米朝間の戦争勃発の可能性は常に存在し、韓国と日本も深刻な脅威と受け止めている。北朝鮮の戦略軍司令官によるICBMの発射、核弾頭の小型化、再進入技術の開発、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推進などは北東アジアにおける安全保障の構図を乱し、軍事バランスを揺るがしている。

朝鮮半島地域における戦争や紛争の発生を防ぐために、日韓間の安全保障上の協力、北朝鮮問題における日米韓3国の連携を強化していくべき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朝鮮半島有事の際、米国はもちろん、韓国と日本が本当の当事者であり、甚大な被害を被るのは必至だ。文在寅大統領が8月15日の光復節(解放記念日)演説で強調したように、朝鮮半島での軍事行動は韓国だけが決めることができ、誰も韓国の同意なくして軍事行動を決めることはできない。米朝間の相互攻撃は決して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であり、韓国と日本は当事者としての自覚をもって米朝間、米中間の対立を緩和させる必要があるだろう。日米韓の安全保障上の協力や北朝鮮問題での3国連携では固

い結束を維持すべきだろう。

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の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中で、日韓両国はお互いを配慮し合っている。韓国政府は慰安婦問題は重要であるが、両国関係の足かせ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認識を繰り返し確認した。文在寅大統領は日本の政治家と会い、少女像問題に対する客観的かつ冷静な認識を表明した。日本政府も同じく、相手に対して外交上の自制心を発揮している。韓国外交部(日本の省に当たる)の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合意を検証する作業部会(タスクフォース)の発足に具体的に触れることは控えながら、慰安婦問題日韓合意の誠実な履行を再び確認することにとどまった。8月15日の終戦記念日に日本の安倍首相と閣僚らは全員靖国神社への参拝を見送った。1985年に国際社会から批判を受けた中曽根首相が靖国神社への参拝を取りやめて以来、日本の首相と閣僚らが参拝しなかったのは初めてのことだ。

日韓両国関係が表にはうまくいくように見える背景には、朴槿恵政権における失敗した日韓関係が反面教師として作用しているからだ。任期初期に二国間の信頼構築が必要であることを両国政府が共感しているからだろう。文在寅政権はピープルパワーによって生まれた民主政権であり、そのため国民のコンセンサスや普遍的な原則に基づいた選択をせざるを得ない。それは、革新系政権の正当性に関わるからだ。

同作業部会は「被害者中心主義」に基づき、当時の日韓合意に至った経緯を明かし、客観的な評価を下す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る。年内にまとめられる最終報告書がどう活用されるかはあくまでも外交部と大統領府の選択にかかっている。もちろん、同作業部会の委員はこの問題の「敏感性」や「揮発性」をよく知っているはずだ。慰安婦問題の日韓合意の再検討は長期的かつ持続可能な日韓関係の構築に欠かせない過程の一部ととらえるべきだろう。

文在寅政権に対する日本政府や市民社会の否定的な認識は周知の事実であり、韓国内の専門家や有識者たちもこれを十分認識している。しかし、1990年代後半から韓国内における革新>革新>保守>保守への政権交代を経験する中で、保守系政権に劣らず革新系政権も日韓関係をうまく管理できるという自信もあるはずだ。韓国の革新系政権-日本の保守系政権の下で、1998年の金大中-小渕による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は両国関係を飛躍的に発展させた。金大中政権の日本文化開放、日韓国民交流、2002年の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共催、実質的な安全保障上の連携強化などは良い前例となっ

ている。

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における日韓関係は比較的に弱体化していたが、米韓関係においては実用的な外交政策や政治的リアリズムが発揮された点も同時に評価されるべきだ。盧武鉉政権は米韓F T A締結、イラク戦争への兵士派遣を通じて、両国関係をより成熟した同盟関係に発展させた。実用主義とリアリズムが韓国の革新系政権の外交的資産であり、伝統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文在寅政権も例外ではなく、実用主義とリアリズムを基に、日韓両国の市民社会を中心とする持続可能な両国関係を構築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う。

2018年10月8日は、金大中大統領と小渕恵三首相による未来志向の両国関係を目指した「21世紀に向けた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から20年を迎える。お互いへの否定的な認識や偏見に依存するより、新しい対話と協力に向けた制度や基盤を構築していく必要がある。東アジアで市場経済と自由民主主義を共有している日韓両国は、アジア地域における数少ないO E C D加盟国であり先進国として、お互い頼もしいパートナー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北東アジアにおける紛争防止や平和体制の構築、東アジアの共同発展のモデル、そして域内の平和と繁栄のための「公共財」として、日韓間の協力と連携をさらに強めていくことが必要だろう。

第2セッション 発表

北東アジアの平和に向けた 日韓協力の模索¹⁾

チョ・ヤンヒョン(国立外交院 教授)

1. はじめに

現職大統領の弾劾と大統領選の繰り上げ実施という、憲政史上前代未聞の事態を経て文在寅(ムン・ジェイン) 政権が発足した。新政権の国政運営方針によると、国内においては成長と福祉による経済の先進化が、国外においては主要国との意思疎通と協力による朝鮮半島の安定化が、政策の柱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る。特に、後者の対外関係においては、「強い安保と責任ある国防」、「南北の和解と朝鮮半島の非核化」、「国際協力を主導する堂々たる外交」を掲げて「平和と繁栄の朝鮮半島」を実現するとの構想だ。

だが、混迷する国際情勢の中で、文在寅政権は政策推進における難しいかじ取りを迫られている。長引く世界経済の先行き不透明感、米中の力関係の変化、近年エスカレートする北朝鮮の核・ミサイルによる挑発行為に伴う朝鮮半島情勢の不安定要因の拡大などを踏まえると、朝鮮半島を巡る政治・安保・経済の状況にはいずれも厳しいも

1) 本稿は、『韓日協力』秋号に掲載された拙稿「文在寅政権発足と対日外交の課題」を修正・補完したものである。なお、本稿で示されている意見や主張は著者の個人的見解であり、韓国外交部の公式見解ではないことをお断りしておきたい。

のがある。

韓国は伝統的に米国との同盟関係や自由貿易体制に「死活的な利害関係」がある。米国第一主義(America First)と保護貿易主義を掲げるドナルド・トランプ政権の発足以来、通商政策と対北朝鮮政策が米韓関係の主な懸案となっている。今年で中韓国交正常化25周年を迎えたが、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配備でこじれた中韓関係は改善する気配がない。韓国は保護貿易主義という荒波に立ち向かう一方で、北朝鮮の核問題やTHAAD問題といった戦略・安全保障上の問題を巡り米中との関係において新たな位置付けを模索する必要性に迫られている。

一方、北東アジアにおいては、「地政学の復活」に伴い「アイデンティティ政治」が時代の大きな流れとして浮上し始めた。域内の主要国はこぞって「強い国」を求める国民世論に便乗した結果、海洋・領土主権や歴史認識を巡る対立が激しくなり、外交が国内政治の手段として利用され対外関係においては「政経分離」の原則が破られることが多くなった。特に、日本による植民地支配や大陸侵略に関わる歴史認識問題が、北東アジア国際関係の対立要因として固定化している。

こうした対外環境は、文在寅政権の対日外交にさらなる困難をもたらしている。近年の日韓関係は、従軍慰安婦問題、日本統治時代の徴用工問題、独島問題といった両国間に横たわる歴史問題の他に、東アジアにおけるパワーバランスの変化、アイデンティティ政治という観点から、対中政策や北朝鮮問題といった安全保障上の懸案と連動して展開される傾向が目立っているからだ。それに伴い、我々が解決すべき対日外交の課題には、日韓関係の最大の懸案とされる慰安婦問題の他にも日韓間の政治・安全保障問題、経済協力、民間交流などといった二国間の懸案、地域やグローバルレベルでの協力、さらに日本の保守化に伴う韓国の中長期対策などが含まれる。我々は日韓間の歴史に絡む諸懸案はもとより、北東アジアの安定と平和というマクロ的な地域戦略の観点から、日韓関係の戦略的な意味合いを見直し両国間における未来のビジョンを同時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だ。

こうした問題意識の下、本稿では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の対日外交に対する評価と共に、日韓関係にさらなる不安定性をもたらす国内・国外の環境要因を考察し、その上、北東アジアにおける安定と平和という視点から、日韓協力の方向性や対日外交の対応戦略を示したいと考える。

2. 歴史問題を中心とする対日外交の功罪

慰安婦問題による日韓両国の長引く緊張関係は、文在寅政権の対日外交に暗い影を落としている。朴槿恵政権の発足後3年間は日韓両国は慰安婦問題を巡って対立を続けていた。対日外交において慰安婦問題の解決を優先した結果、外交、安保、経済、文化、人的交流など他の領域での協力関係は薄れた。2015年末の両国政府による慰安婦問題に関する合意で、2016年の一年間は一時関係が改善されたものの、同年末から日韓関係は再びギクシャクし始めた。釜山の総領事館前の少女像設置、日本の竹島（独島）領有権主張、韓国国内における慰安婦合意の再交渉の動きなどで、文在寅政権発足前後の日韓関係は前途多難であった。

振り返ってみると、2011年に韓国憲法裁判所による慰安婦問題関連の判決が下されて以来、慰安婦問題は日韓関係の最大の懸案となっている。2012年に李明博大統領の独島訪問と天皇に謝罪を求める発言も、ある意味では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誠意のない態度への失望感の表れではないかと思う。朴槿恵政権は発足早々、三一節（3・1独立運動記念日）や光復節の記念式典における大統領の祝辞などを通じて日本政府に向かって慰安婦問題の解決を求め、ワシントンや国連などの国際社会を舞台に慰安婦問題を巡るいわゆる「歴史戦」を繰り広げるなど、韓国の対日外交は慰安婦問題の動向によって、大きく左右され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

歴史問題を巡る日韓間の相互不信は経済協力や安全保障協력에深刻な悪影響を及ぼした。日韓通貨スワップ交渉の中断、両国間の貿易と投資の減少、社会文化・人的交流の縮小、在日韓国人の生活困難や安全保障に関する日韓間協力の行き詰まりなどがその代表例だ。特に、日本国内での韓流ブームは急速に冷め、観光客や留学生数の減少をもたらした。日本国内における「ヘイトスピーチ」の横行などにより、100万人もの在日韓国人の暮らしに深刻な影響を及ぼした。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応するための両国の協力体制の足並みが乱れた他、朝鮮半島の統一のための環境づくりという中長期的な外交目標にも否定的な影響を与えた。こうしたことは、日韓両国はお互いの意思疎通や協力体制がうまく機能しないと、両国ともマイナスになる関係であるということを如実に証明してくれた。

さらに、日韓関係の悪化は韓国の対米外交を行う上での費用増加につながった。慰安婦問題を巡る国際社会における強力な対日圧迫の展開は、日本の歴史修正主義をけん制する成果を生み出した。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対立に伴う日米韓協力体制の足並みの乱れを懸念したオバマ政権は、日韓関係の仲裁に乗り出し、保守系の安倍内閣は2015年末、日韓間の慰安婦交渉の妥結を決断せざるを得なかった。だが、日韓間の「歴史戦」は米国中に「韓国疲労症」を広げ、急変する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情勢にもかわらず韓国は未来に向けた協力より過去の問題にこだわるというネガティブなイメージを植え付けた。これは結果的にトランプ政権発足以降、日米同盟の強化が求められる中で、日米韓協力体制や米韓関係に負担を与えてしまった。要するに日韓関係は米韓関係の主な懸案となったのだ。

3. アイデンティティ政治と歴史問題の争点化

日本による過去の歴史への反省や歴史を見つめること、そして日韓間の歴史問題の解決が、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構築する上での基本要素となることには異論の余地がない。しかし、安倍内閣は第2次世界大戦の敗戦国として国際社会に向かって謝罪や反省を行うべきとの歴史認識から脱し、「歴史修正主義」へ傾斜しつつある。日本政府は憲法や日米安保条約のように、「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を加速し、地域レベルやグローバルレベルでの対外関与を拡大してきている。中国の台頭に伴う地域秩序の流動化を背景に、地域大国としての存在感をアピールしようとする日本、特に過去の歴史への反省の伴わない軍事的意味での「普通の国」になろうとする日本の動きに、我々は懸念や警戒を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金泳三(キム・ヨンサム)、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などの歴代政権が発足するたびに、それを機に日韓両国は未来志向の関係を追求していたが、その後、歴史や領土問題を巡り日韓関係は悪化し、こじれた関係は修復できないまま政権交代が行われるといったことの繰り返しだった。さらに、朴槿恵政権に至っては常に歴史問題が他の懸案より優先されるのが実情だった。これは日韓両政府が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に基づいて日韓の懸案を管理してきた、いわゆる「65年体制」

がもはや時代的限界に達したことを意味する。歴史認識と領土問題に関する立場の違いを埋められないまま、安全保障や経済の論理を優先して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は、冷戦期における朝鮮半島の安定化や経済発展には貢献したものの、今や歴史認識と領土問題の争点化という根本的な限界に突き当たったということだ。

1990年代以降、日韓関係が歴史認識と独島問題を中心に対立の構図が鮮明になった背景には、冷戦終結に伴う日韓間における安全保障上の連携体制の必要性の低下、日本社会の保守化や外交問題の政治争点化、そして韓国の民主化や非政府主体の影響力増大などがある。日韓両国間における相対的な国力の差は縮まり、韓国の民主化や経済発展で両国は民主主義と市場経済体制を共有するようになった。両国間の民間交流や文化交流が拡大・深化され、対外関係における世論やN G Oなどの非国家主体の役割が大きくなった。

こうした構造的な変化を背景に、日韓両国において歴史認識や領有権問題といった外交上の懸案が政治の争点になり、外交当局がこうした懸案を主体的に取り上げる出番が著しく減った。日本の政界では「強い外交」を叫ぶ戦後世代の保守系政治家らが主流派として登場し、歴史修正主義や領土民族主義が頭をもたげ、歴史問題への反省や謝罪を基本としてきた日本の対外態度が変わり、戦後の日本外交の基調となった政経分離の原則は破られることが多くなった（例えば、日韓間の歴史認識問題が通貨スワップ交渉や韓流ブームに悪影響を及ぼしたこと）

特に、2006年に発足した第1次安倍内閣は、国民統合のために理念や歴史を強調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政治 (identity politics)」を追い求めたという点で、日本政治の保守化傾向を示す代表例と言える。安倍内閣が追い求める政策は、国内においては憲法改正や愛国心の涵養に向けた教育改革、自衛隊の軍隊化、国家危機管理体制の強化、国外において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による日米同盟の強化、「強い日本」の再建などを中長期的に推進することを柱としている。安倍内閣と自民党は日本の植民地支配に対する謝罪の言葉を盛り込んだ「村山談話」と、日本軍による慰安婦募集の強制性を認めた「河野談話」を修正しようとし、2015年に安倍総理は終戦70年を記念する首相談話（安倍談話）を発表し、いわゆる「積極的な平和主義」を掲げた。こうした日本の過去への回帰志向や歴史修正主義の傾向が現れるたびに、韓国社会の反発をもたらし、日韓関係はさらにぎくしゃくした。

4. 北東アジアの「公共財」である日韓協力の戦略性

2010年代に入り、現実主義の国際政治観が重視されつつある北東アジアの国際情勢によって、韓国の外交は国益の最大化という戦略的観点から日韓関係のあり方を見直すことを余儀なくされている。日韓間の協力関係は米韓同盟や日米韓協力体制と深く連動しているだけでなく、韓国の外交が北東アジアや国際レベルにおいて朝鮮半島の安定化や統一に向けた外交活動を展開するための必要条件と言える。安定的な日韓関係は米韓関係と共に、韓国外交の伝統的な支持基盤であり、対中・対ロ・対北朝鮮政策を円滑に進めるための土台となるのだ。

政治経済体制を共有する日韓の協力関係は両国の国益はもちろん、朝鮮半島や北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に欠かせない「地域公共財」と言える。北東アジアの国際関係が米国と中国を中心に急速に再編が進み、「G 2」秩序の出現が取りざたされる中で、これら大国の影響力をけん制し、域内諸国の利害関係を調整するのは韓国と日本をはじめとする中堅国の役割だろう。米中両国が主導する北東アジアの秩序が域内の中小国にとって不都合なものにならないようけん制するためには、何よりも日韓両国の協力が不可欠であるからだ。

特に、米国第一主義を掲げ、保護貿易主義と孤立主義的な姿勢の強い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てから、国際政治・経済の不確実性が高まっただけに、日韓間の戦略的協力関係の重要性もやはり大きくなったといえる。それだけでなく、国際経済の低迷や不安定要因、北朝鮮の相次ぐ核・ミサイル挑発、THAAD配備による中韓関係のこじれなどを踏まえると、日韓間の協力の必要性は以前にもまして高まっているといえよう。

実は、日本の地域的な安全保障の役割の拡大が韓国に与える戦略的価値は二重の意味を持つ。日本が日米同盟強化を通じて、地域及びグローバルレベルでの安全保障の役割を拡大することは、中長期的に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秩序に地殻変動を起こす可能性がある。軍事的な意味で日本が「普通の国」になることは、朝鮮半島に対する日本の影響力の拡大につながる可能性が高い。日本が歴史問題を解決しないまま再武装した場合、韓国や中国など過去に侵略や植民地支配による被害を受けた周辺国の反発を招きかねない。一方、日本が「普通の国」になることは、地域安全保障に対する日本の前向きな関与を可能にすることで、地域の平和と安定に貢献できる。特に、米国の影

響力低下を視野に入れた中長期的な観点からすれば、日本は、脱冷戦後、経済力や軍事力を飛躍的に増大させている中国が、地域の秩序を乱すことなくソフトランディング（軟着陸）できるようけん制する機能を果たせるだろう。

一方、安倍政権は国内において保守理念の制度化や軍事的意味での「普通の国」づくりを推進し、国外においては日米関係の強化、米国、豪州、インド、東南アジア諸国との連携強化による中国けん制と共に、日中関係の安定化、日ロ関係の改善を並行して進めている。こうした戦略的外交の観点からすると、日本政府は韓国に対して、表では民主主義、市場経済、米国との同盟関係強化を共有する大切な国だと強調しながらも、水面下では韓国の戦略的な価値を見直す作業を行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みられる。

文在寅政権の発足前後において、日本では慰安婦問題の再交渉、中韓関係の緊密化、対北朝鮮政策の見直しなどの可能性を念頭に置いて日韓関係の相対的な流動化を懸念する声が上がっていた。文在寅大統領の追求する政策路線に対する日本の大衆世論には「反日」「親北」と見る向きが多い。文大統領が、当選前に慰安婦合意の再交渉を唱えたのが「反日」の証だったとすれば、北朝鮮への圧迫より対話を重視する姿勢は、「親北」と受け止められる根拠となった。日本社会が文在寅政権について「反日・親北」ととらえるのは、盧武鉉政権に対する記憶があるからだ。盧武鉉・小泉政権下では、両国は歴史認識問題や独島領有権問題を巡り激しく対立していた。日本人にとって盧武鉉大統領は歴史問題をしつこく取り上げて反日感情を掻き立て、北朝鮮への融和的な政策で日米韓3国の足並みを乱した張本人として記憶されている。そして、盧武鉉大統領の最側近だった文在寅大統領がこうした理念を受け継いでいると受け止めているのだ。日本の多くの保守系メディアでは、文在寅政権を「盧武鉉政権2.0」と表現している。日本の人々は最近エスカレートする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挑発を見て、文在寅政権の対北朝鮮融和政策が日米韓の協力体制に揺さぶりをかける結果をもたらし、金正恩政権の思うつぼにはま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ているのだ。

このように「近くて遠い国」といわれることからわかるように、戦後の日韓の相互認識は二重の意味を持つ。韓国にとって日本は「清算の対象」であり、冷戦体制から生き残り、経済を発展させる上でなくてはならない「準同盟国（quasi-alliance）」だった。日本は韓国で新政権が発足するたびに、歴史問題によって反日感情を助長し、

「ゴールポスト」を動かしながらしつつこく対日主張を展開していると文句を言いながらも、朝鮮半島の安全保障情勢が日本の平和と安全に直接影響を及ぼしうることから、日韓間の円滑な安全保障協力を望んできた。世界的な冷戦体制が崩壊するとともに、日韓の緊張関係もやや緩和したとはいえ、経済や安全保障の分野において両国間で円滑な意思疎通が行われないと、お互いにマイナスになるということには変わりがない。

特に、最近の北東アジア情勢は、両国が日韓関係の歴史的特殊性に対する冷静な認識に基づき、国益の最大化という観点からお互いの戦略的価値を再認識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から半世紀以上となる日韓関係が、植民地支配の加害者と被害者、あるいは先進国と開発途上国という垂直的な特殊関係の性格が強かったとすれば、「新たな常態 (new normal)」の日韓関係は水平的な普通の国同士の関係の特徴とするだろう。これは北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秩序の再編が急速に進んでいる中で、日韓両国がお互いの戦略的価値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と、協力はますます厳しくなる時代に差し掛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韓国にとっては、北東アジアの安定と平和という地域のかつ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日本を「制約要因」としてではなく、「機会要因」として活用するためにはどんなアプローチが必要なのか、歴史問題に振り回されない日韓関係をどう構築していくべきなのかについて深く考えてみる必要があると思う。

5. 対日外交の接近法

前述したように、昨今の日韓関係には脱冷戦期後の日韓関係における歴史問題の争点化という「制約要因」とともに、国際情勢の変化の中での日韓協力の必要性増大という「結束要因」が同時に作用しているといえる。韓国の対日外交は保守化の進む日本を相手に、歴史問題と安全保障問題といった全く相反する利害関係を最小化し、信頼関係を再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難題を抱えている。こうした観点からすれば、文在寅政権における対日外交の中核は、両国間の個別的な懸案中心の対応を超えて、マクロ的な意味における日韓関係の新しいパラダイムという時代の要請に応え、日韓協力関係の構築に向けた土台作りにあるといえるだろう。

こうした取り組みは決して新しいものではない。日韓両国は過去にすでに共同作業を通じて「過去の直視」、「相互理解と信頼」、「善隣友好の協力」、「共生複合ネットワーク」などの概念を中心に、日韓の未来に向けたビジョンや実践方策を模索したことがある。金大中政権は小渕内閣に、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1998年）を通じて、「過去を直視し、相互理解と信頼に基づいた友好協力関係」を日韓関係の未来のビジョンとして提示し、過去最高の協力関係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た。さらに、これを基に、南北首脳会談を実現し、朝鮮半島と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に貢献することができたのだ。日韓協力と南北対話を、二者択一しなければならない排他的関係と見なすことなく、これを並行して追求することで、朝鮮半島問題の解決における主導権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たわけだ。こうした観点からすると、文在寅政権は対日政策に関しては、金大中政権の努力と成果をスタート地点とするべきだ。安全保障と経済の先行き不透明感が強まる中で、円滑な日韓協力関係は韓国の外交が朝鮮半島問題を主導する上での必要条件となるという点で、国益の最大化のためには政権初期の高い支持率を活用して対日関係の改善に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韓間で未来のビジョンを共有するためには、両国関係を見つめる基本的な考え方における発想の転換が求められる。まず、「過去と未来」の視点を共有する試みだ。過去の歴史との向き合いと相互協力を同時に行うことで、「支配・被支配の記憶に執着する過去への回帰志向の発想」か「未来に向けた前向きな協力だけを強調する」か、といったような「二分法的アプローチ」を乗り越えるということだ。二番目に、「二国から多国へ」の関係の転換である。両国間の懸案だけを優先するのではなく、北朝鮮問題や中国の台頭などを踏まえ、安定的な地域・世界秩序の構築という多国間の観点から日韓両国のお互いの戦略的価値を再認識した上で、具体的な協力策を模索するということだ。三番目に、「政府主導から市民社会へ」の主体の多様化である。日韓関係において政府-非政府主体（世論、NGO）間の意思疎通の強化や成熟した市民意識を基に、過度な民族主義、ポピュリズム、外交の政治手段化をけん制し、日韓関係の安定性や政策の一貫性を確保するということだ。

次に、対日外交の基調として「分離対応」の原則、つまり、「ツートラック・アプローチ」を堅持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すでに指摘したように、日韓は経済や安保など両国の懸案はもちろん、地域・グローバルレベルでの懸案への対応において、政府間の円滑

な意思疎通がうまくできなかった場合、両国とも被害を被ることになる構図となっている。従って、日韓間で歴史問題や独島関連の摩擦が起きたとしても、その影響が他の分野へ及ぶのを最小限に食い止める「分離対応」が国益の最大化に向けた現実的な方策と言える。歴史問題や独島問題において韓国の立場を貫きながら、他の分野では日本との協力関係を維持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朴槿恵政権が「分離対応」の原則を掲げながらも、実際は歴史問題への過度な傾斜で対日関係における選択の幅を狭めることになったのを反面教師にすべきだ。民主国家において国民の世論は重視されるべきだが、反日感情が対日外交を左右する状況に陥ることは警戒すべきである。繰り返される日韓間の歴史問題は、既存の慣行や慣例に従って処理することが必要だろう。特に、現在最高裁で係争中の元徴用工らの補償関連裁判は、その判決次第では慰安婦問題以上に日韓関係に及ぼす影響力が大きいと予想されることから、これに対する対策づくりが急がれる。歴史問題の対応においては、「再発・悪化防止」に向けた管理という意味での取り組みと、歴史認識の共有という「完全な解決」に向けた長期的な取り組みを並行して進める必要がある。日韓歴史共同委員会などを立ち上げ、研究者や教育者が中心となって歴史問題に取り組めるようにする方法を講じる必要がある。

最後に、歴史認識の共有に向けた国内外の公共外交の強化が大切だ。外交当局は「日韓関係の全体を主導的に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こだわらず、歴史認識の共有とビジョンを導き出すよう後押しする役割を果たすべきだ。国内では慰安婦問題や独島問題関連の専門家、NGO、利害当事者を中心に議論し合える場を設け、社会のコンセンサスを得ることが求められる。慰安婦問題と独島問題を担当する大使職を新設し、NGO関係者や民間の専門家を任命する方策を積極的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これと同時に、日本社会の同問題に理解のあるグループとも手を組んで、人類の普遍的価値という意味での過去の歴史への反省や和解が世界的な流れであり、歴史の歪曲が、日本が国際的な役割を拡大する上で足かせになることを喚起し続けることも重要だ。

6. 日韓協力のアクションプラン

文在寅政権は、日本では保守党政権が当面存続する見通しであるという前提の下で、こじれた日韓関係の改善に取り組む必要がある。今年に入り、日本の安倍政権の支持率が下落したとはいえ、自民党の支持率がさほど変わらないことや野党勢力の支持率が伸びないこと、安倍外交の成果への高い支持度などを踏まえると、安倍内閣は2018年以降も継続する可能性がある。たとえ、日本で政権交代が行われたとしても、最近日本社会の保守化傾向を考えると、日本の次期政権も保守系政権になる可能性が大きい。従って、日本側の前向きな歴史への反省を望むことは当面難しいという現実を冷静に受け止めた上で対日政策に取り組む必要がある。

まず、日韓関係の最大の懸案となる慰安婦問題の出口戦略を講じる必要がある。文在寅政権発足以降の日韓首脳会談や電話会談、相互の特使派遣などからわかるように、日韓関係の行方は慰安婦問題の対応にかかってい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今年7月の文大統領と安倍総理間の初の首脳会談においても、慰安婦問題は最大の関心事だった。安倍首相が2015年の日韓慰安婦合意の履行を要求したのに対し、文大統領は「国民の大多数が情緒的に受け入れられずにいるのが現実」とし、両国の意見の隔たりを再確認した。

文在寅政権は国民感情に照らしてみても、朴槿恵政権による慰安婦合意をそのまま受け継ぐ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を堅持し、現在の外交部を中心にそれに対する検証作業を行っている。韓国社会には2015年の慰安婦合意の破棄を宣言して日本政府からもらった10億円を返そうという声が上がっている。しかし、合意を一方的に破棄した場合、日本政府との間で新しい合意を導き出すことは難しいことから、慰安婦問題は未解決のまま残る可能性が高い。この場合、日韓関係の悪化は言うまでもなく、国際社会における政策の連続性に関わる日韓間の責任問題につながり、外交や国益にマイナスになりかねない。

従って、慰安婦被害者や関係者、専門家などの意見を汲み上げ、既存の合意を補完するのが現実的な方策ではないかと思う。すなわち、(1) 2015年の日韓合意のバージョンアップ、(2) 安倍総理自らの謝罪や反省の表明、(3) 慰安婦問題の共同研究・調査・教育委員会の設置などを中心に、対日交渉を開始する方策を検討する必要

がある。日本政府が求める少女像の移転問題は、その環境づくりが重要であることから、慰安婦記念館を設立した上で大使館や領事館前の少女像を移転するのが現実的な方策だと言える。

二番目に、日韓首脳会談の早期開催を通じて、首脳同士の交流を制度化すべきである。朴槿恵政権では韓国大統領の訪日が皆無だったことからわかるように、両国の首脳同士の交流は円滑な日韓関係のバロメーターになると言える。文在寅政権発足後、7月に行われた20カ国・地域（G20）首脳会議をきっかけに日韓首脳会談を開催したが、今後もこうした様々なサミットの機会や、「シャトル外交」などを通じて日韓首脳会談を行うことが望ましい。特に、日本で予定される日中韓首脳会談の際や、あるいは2018年の初めに文在寅大統領の訪日の際に日韓首脳会談を行い、今の正常でない関係を正常化する必要がある。

上記の首脳会談開催とともに仮称「日韓新時代協力宣言2018」つまり、「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2.0」を発表し、日韓関係改善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する必要がある。前述したように、1998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は脱冷戦期の日韓関係における未来のビジョンを示したものと評価されている。その20年の節目に、日韓首脳が1998年の宣言を今の時代にふさわしい内容に改め、歴史問題の解決、安全保障協力、若者の雇用創出の協力、日韓FTA、青少年-地方自治体-市民社会の交流、生態-環境協力、エネルギー協力など、協力のための諸方策を盛り込んだ新しい宣言を示すことができれば、日韓関係の発展に非常に有意義なものになるだろう。

三番目に、日韓の安全保障上の協力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脅威に対する抑止力や米韓同盟の実効性の確保という面で欠かせないものではあるが、歴史問題の進展などを考慮してそのペースを調整しながら進めることが求められる。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前提とする日本の安保法制は、2016年3月に施行された。日本が中国・北朝鮮脅威論を全面に押し出して、米国の安保パートナーとして位置付けられれば、日韓、日米韓の安全保障上の協力強化に対する米国の利害はますます大きくなるだろう。従って、今後、日韓や日米間の安保協力強化（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充実化、ACSA（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の締結など）に対する日米の圧力が予想されることから、対北朝鮮抑止力の強化という意味での日米韓3国間の協力の必要性を国民に説得する努力を行い、日米に対しては歴史問題の特殊性と敏感性を根拠に、日韓安保協力の推進は

韓国にとって有利になるペースで行われることが前提になるということを説得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THAAD配備、日韓の安保協力などといった外交安保上の懸案は、米中との関係設定という韓国の中長期国家戦略にかかわる敏感な問題であることから、その決定過程において、必然的に国内外からの論争を巻き起こす可能性が多い。脱冷戦後、韓国外交の中核的な課題は政権のイデオロギーを問わず、米韓同盟の強化、中韓協力の拡大、日韓関係の改善、南北関係の安定化や統一に向けた基盤づくりという目標の間で、お互い利害が絡み合う要因を最小限に減らし、韓国の影響力や調整力の最大化につながる戦略的な基盤を作っていくことにある。北朝鮮の挑発行為がエスカレートしている中で、韓国の対北朝鮮抑止力を高めるためには、対北朝鮮問題における日米韓3カ国の連携を強化すべきであるが、対外関係の位置づけにおいての急激な方向転換は、北東アジアにおいて「日米韓vs中ロ朝」という新しい冷戦構図の出現を助長し、結果的に北朝鮮の思うつぼにはまり、朝鮮半島の非核化や統一に向けた基盤づくりに水を差しかねないことを肝に銘じるべきだ。

最後に、対日外交の基調となるツートラック・アプローチの延長線上で、歴史、政治、安保分野において、対立してもお互いプラスになる実質的な協力事業を積極的に掘り起こすべきだ。日韓両国は国際経済秩序の不透明性に備え、政経分離原則に基づいた二国間通貨スワップ交渉を再開し、トランプ政権発足後揺れるアジア太平洋地域の経済秩序の安定化に向け、自由主義市場経済の原則に基づいた貿易における新しい枠組み作りにお互い協力することが必要だ。

日韓間の人的移動の促進や雇用共同市場の制度化方策を積極的に進める必要がある。少子高齢化で日本は労働力不足が進む一方で、韓国は若年層失業が深刻であることから、両国の人的移動を促進し、熟練労働者市場の統合を通じて若者の雇用問題解消が期待できるからだ。それに加えて、日中韓連携の一環として、3国間のオリンピック交流プログラム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2018年平昌冬季五輪、2020年東京五輪、2022年北京冬季五輪と、北東アジアで相次いで開かれるオリンピックを3国が連携し多様な交流・協力プログラムを発掘・実施することができれば、五輪開催の相乗効果とともに、3国間協力の発展が望め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第2セッション 討論1

北朝鮮核問題での日韓協力を

米村耕一 (毎日新聞ソウル支局長)

北朝鮮は8月29日、日本列島を飛び越える中長距離弾道ミサイル「火星12」を発射した。9月3日には6回目の核実験を強行した。朝鮮半島情勢の緊張状態は、かつてなく高まっている。

安倍晋三首相は今月13日の日経新聞とのインタビューで「北朝鮮が検証可能かつ不可逆的な非核化にコミットした上で、ようやく話し合い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米国、韓国とも一致している」と述べている。

日米韓にとって、特に「核抑止力」については米国に頼るほかない日韓両国にとって、非核化を前提とした北朝鮮との対話・交渉を始めるとするのは極めて切実な目標だ。一方、北朝鮮がすでに何度も彼らの「核抑止力」を交渉のテーブルに載せないと明言していることは周知の通りだ。

さらにこうした目標を困難にする二つの要素が存在する。一つはトランプ米大統領の予測困難な言動だ。

たとえばトランプ氏は8月8日には「世界がこれまで見たことのないような砲火と激烈な怒り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北朝鮮を威嚇した。ところが22日には一転して「間違いかも知れないが、何か肯定的なことが起きる可能性がある」と期待感を示した。1週間後に北朝鮮が「火星12」を発射すると、今度はツイッターに「米国は25年間にわたって北朝鮮と交渉を試み、カネをゆすり取られ続けてきた。対話は解決策ではない」と投稿している。そこに一貫性のある戦略はうかがえない。

そうした判断のふれのなかで米国が、十分な検討を経ないままに取り返しのつかない行動へと踏み切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はやはり以前の米政権に比べて高まったと

えいるだろう。

もう一つはもちろん、北朝鮮が核・ミサイル能力を増大させ、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も限りなく完成に近づい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る。

この3年ほどの北朝鮮のミサイル開発のスピードは、あまりにも急速だった。2013年春、私は北京で、ある朝鮮人民軍出身でおそらく今も軍のために仕事をしているビジネスマンと話し込んだことがある。彼は「われわれには海中から発射するミサイルを持っている。技術力は君らが想像する以上だ」と語った。「北朝鮮はSLBM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か」と驚いて、専門家に相談すると、当時はみんなに「まさか」と笑われたのを覚えている。しかし、北朝鮮は2016年8月に潜水艦発射型ミサイル(SLBM)「北極星1」の発射実験に成功した、2015年5月に北朝鮮メディアが水中発射の映像を公開した際にも、軍事専門家からは「パージ船から発射したものだ」との指摘が出た。しかし、今は誰もSLBMの存在を疑っていない。北朝鮮のミサイル技術の進展は専門家の予想を裏切り続けている。

北朝鮮は核・ミサイルの技術向上によって「世界の政治構図は根本的に変わった」と見ており、核問題を巡る政治的駆け引きでも主導権を取れるようになったと見ている。北朝鮮の持つこうした自信は、ますます朝鮮半島非核化という日韓共通の目標を困難にしている。

さらに、万が一にも核・ミサイル技術の進展に裏打ちされた北朝鮮の「自信」と、それに対する「予測困難さ」を見せる米トランプ政権の「いらだち」が衝突する方向に向かえば、大きな被害を受けるのは日本と韓国になる。米韓軍と北朝鮮軍が全面衝突する事態となれば、ソウルも砲火に包まれるだろうが、日本の主要都市も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の標的になるのは避けられないからだ。

こうした危機を回避すること、そしてまた将来的な非核化を前提とした北朝鮮との交渉をスタートさせるということ、これはいずれも日韓両国共に絶対に譲れない、必ず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目標だ。そして、特に後者は極めて実現が困難な目標でもある。

そのためには北朝鮮に対する圧力も極めて重要だし、また逆に北朝鮮が姿勢を変えた場合に提示できるインセンティブについても、日韓両国はしっかり話し合う必要がある。その課程で、米国や中国、ロシアを共に説得していく必要もあるだろう。

私たちにとって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現実、北朝鮮周辺5カ国の中で、日韓両国は共に、核問題の解決に向けて実質的に持っている影響力は最も小さく、その一方で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の動向によって受ける否定的な影響は最も大きい国だということだ。だから、日韓の協力が不可欠だと考えている。

もちろん、日韓間には慰安婦問題など長くこじれている歴史問題がある。ただ、率直に言ってこうした問題に、いま直ちに手を着けることは現実的ではないと思える。すでに両国ともに感情的な問題になっているからだ。慰安婦問題を取り扱うときに、「否定的な情緒」があるのは、韓国だけではなく日本も同様だ。日本政府による明確な責任の表明と謝罪が含まれる2015年の慰安婦合意によって、かえって問題が複雑になり、韓国内で非難されるという事態には、日本国民の側にも大きな徒労感があるというのが現実だ。

まずは北朝鮮の核問題を少しでも肯定的な方向に向けるということのために、日韓両国が全力を尽くして協力する。その後で、そうした課程で培われた信頼関係を、歴史問題の進展のために振り向けるというのが現実的な対応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

第2セッション 討論2

倉田秀也 (防衛大学校)

I. 日韓関係の二つの次元——「安保」と「道義」

日本にとって日韓関係は、日米同盟の従属変数に近い。他方、韓国にとって日韓関係とは、「安保上の必要性」もさることながら「道義の実現」という側面をもつ。ここでいう「道義の実現」とは、建国後初期の対日外交にみられるように、植民地支配の被害者として加害者である日本を追及することで道義的優位に立つことを指す。にもかかわらず、日韓両国に国交正常化が漕ぎつけることができたのは、佐藤栄作政権と朴正熙政権が「安保上の必要性」が共有されたからに他ならなかった。もとより、日韓国交正常化で「道義」という側面がなくなったわけではなく、また安保協力が時間の経過とともに深ま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日韓国交正常化後も、日韓関係は「安保」と「道義」の二つの間で揺れ動き続けた。

日韓関係において「安保」と「道義」の二つの側面がどう連関しているのか、その相関関係についてヴィクター・チャはある種の経験則を導き出している。それは冷戦期のニクソン、カーター政権のように、米国の対韓コミットメントを低減する姿勢をみせたとき、韓国は「道義」の比重をあえて低めて対日関係の改善を図り、逆に米国の対韓コミットメントが確実なとき、韓国は「道義」を前面に出して日韓関係は悪化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チャがいうように、米国の対韓コミットメントを変数にして、日韓関係をみる視点は、冷戦期の一時期については確かに有効であった。

ところが冷戦終結後、韓国が民主化を果たし、北朝鮮に直接関与する余地が生まれ、北朝鮮脅威を韓国自身が相対化できる余地が生まれると、米国の対韓コミットメントは、日韓関係を決定する有力な変数ではもはやなくなった。例えば、盧武鉉政権期、ブッシュ政権が在韓米軍の後方配置とともに、旅団規模とはいえ削減したにもかかわらず、対日関係は動揺した。冷戦終結後、米国の対韓コミットメントの低減が日韓

関係の改善をもたらすという経験則はもはや効力を失っている。

Ⅱ. 日米韓安保協力と「慰安婦合意」

—米国の対韓コミットメントという変数

(1) 金大中政権と朴槿恵政権の共通項—「安保」という「磁性」

朴槿恵政権の米韓関係を回顧してみると、金大中政権といくつかの共通点をもつ。例えば、金大中大統領と朴槿恵大統領はともに在任中、「日米防衛協力のガイドライン」の改訂・再改訂という日米同盟の「更新」に直面した。また両政権は、次元が異なるとはいえ、米国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導入でも共通していた。金大中政権は限定的にせよこれを受け入れ、後にPAC-2の配備につながった。朴槿恵政権もまた、当初は否定的だったものの、曲折の末THAAD導入に踏み切った。

このように日米韓関係が展開したのは、その時の韓国の政権が米国の対韓コミットメントを確実にし、米国もそれに応じたからに他ならない。金大中大統領は在野時代から「冷戦構造の解体」を掲げ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政権発足直後から「在韓米軍の安定的駐留」を主張し、在任中を通じて一南北首脳会談を経ても一在韓米軍の駐留を揺るがすことはなかった。朴槿恵政権もこれについてはほぼ同様であった。例えば、米軍が握る韓国軍に対する「戦時」作戦統制権は当初、2015年末に韓国軍に返還される予定だったが、2014年秋にこれを延期した上で、以降この問題は「条件付き」で議論することで米国から同意を得た。これに限らず、朴槿恵政権は米韓同盟を揺るがす言動はとらず、米国側も概ねそれに応えた。金大中政権と朴槿恵政権はともに「安保」の「磁力」が働く「磁性」を備え、それに米国は対韓コミットメントの確約で応えたといっていよい。

二つの政権に共通するの「安保」の「磁性」は、日韓関係にも波及した。金大中政権についてはいうまでもない。本会議の主題である「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と「日韓行動計画」は、1998年10月の金大中訪日時に発表された。日本は「ガイドライン」改訂を受け、「周辺事態法」を成立させて安保関連の国内法整備を行ったが、それはその後の日韓関係の障害にはならなかった。朴槿恵政権期、日本は「ガイドライン」の再改

訂後、「安政法制」の成立で国内法整備を行ったが、GSOMIA締結などの日韓安保関係の進展は、これら日米同盟の「更新」と国内法整備を受けてのことであった。ちなみに、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に関する日米韓3国間の情報共有取り決め (TISA) も、これら日米同盟の「更新」と国内法整備と同時並行していたのである。

これは何を意味するか。チャの議論とは対照的に、冷戦終結後の日韓関係の改善は、米国の対韓コミットメントの低減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のではなく、韓国が「安保」という「磁性」を備えていること、ならびに、米国による対韓コミットメントの確約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

(2) 「慰安婦問題」——「道義」の後退か復権か？

確かに、朴槿恵政権は当初は「慰安婦問題」を掲げ、日韓関係は冷却し、朴槿恵大統領は結局、在任中に日本の地を踏むことなく青瓦台を追われた。だが、朴槿恵が「安保」という「磁性」をもち、米国が対韓コミットメントを動揺させなかったことは、日韓関係の改善ももたらした。2015年末の日韓「慰安婦合意」はその所産であった。

日本の立場はここで詳述する必要はない。日本は、1965年の日韓国交正常化で「請求権問題」は「解決済」としつつも、北朝鮮の脅威に直面する日韓両国が歴史問題で安保協力を阻害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認識から、この問題が「請求権問題」に関する日本の立場に波及しない形で解決を試み、朴槿恵政権もこれに応じた。

実際、「慰安婦合意」で日本が韓国の「和解・癒やし」財団に拠出した10億円は、政府の「医療・福祉支援事業」として拠出された。殆どの元慰安婦がその資金を受領している現実をみると、この合意を覆すことが日韓間の「和解」と元慰安婦の「癒やし」をもたらすとは考えにくい。また、「慰安婦合意」に際して発表された岸田外相の談話の一文、「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全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は「河野談話」を確実に踏襲している。また、これに先立つ安倍首相の「戦後70年の談話」に言及された「侵略」・「植民地支配」・「反省」・「お詫び」は、「村山談話」を踏襲している。安倍首相が「河野談話」と「村山談話」を「修正」しようとしている、あるいは安倍政権の歴史観を「歴史修正主義」とする批判はあたらぬ。日本がこれら談話を踏襲していないという批判に対しては、

韓国こそが政権交代で過去の合意を踏襲していないという批判を生む。「慰安婦合意」が「不可逆的」とされるのは、この合意が単に安倍政権と朴槿恵政権の間の合意ではなく、日本と韓国両政府の間の合意だからに他ならない。

なお、これに関連して「戦時下における女性の普遍的な人権」という韓国の主張にも違和感を覚える。「人権」問題から「戦時下における女性の人権」だけを切り取って、対日批判を行うことが、果たして「普遍的」な価値観に基づくものかについて疑念をもつ日本人は少なくない。人権が「普遍的」と主張しつつ、中国で現下問題とされている人権問題について沈黙を守る韓国の姿勢からは、「普遍的」人権という主張は、実は対日批判に固有の主張ではないかとの疑念を生んでいる。

Ⅲ. 文在寅政権と「戦時」作戦統制権

—「自主軍隊」の主張と日韓安保関係

日本では文在寅政権と盧武鉉政権とを同一視する傾向があることは否めない。二つの政権が同じ「進歩主義」という系譜に属することも理解している。「進歩主義」は、冒頭述べた冷戦期の保守政権へのアンチ・テーゼを唱える。したがって、「進歩主義」は、北朝鮮の脅威を対米同盟で抑止する必要性は認めつつも、北朝鮮の脅威を低減するために南北対話に重点を置く。この視点から、外交・安保に関する限り、韓国における「保守」「革新」の構図は、「同盟派」「民族派」の構図に置き換えられる。

もとより、文在寅政権が盧武鉉政権の秘書室長を務めたの対北・外交政策をそのまま復活させるわけではない。盧武鉉政権期、秘書室長の任にあった最側近として、文在寅大統領は当時の米韓同盟の動揺をはじめ、盧武鉉政権の「負の遺産」も認識しているであろう。北朝鮮がICBMの実戦配備に向け、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繰り返すなか、文在寅大統領がトランプ米大統領との間でもった米韓首脳会談は、北朝鮮に対する圧力を加えることを強調しており、多くの面で日本を安堵させた。文在寅は現在のところ、北朝鮮との対話に性急になるあまり、米韓同盟を弛緩させてしまうリスクを冒すことには慎重である。

ただし、文在寅政権の「民族派」としての側面は、確かに認められる。例えば、米韓首脳会談での共同声明では、「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について「条件ベース」として朴槿恵政権時の合意を継承しながらも「早期に」実現することを謳った。ところが、過去の米韓間の合意をみても、「戦時」作戦統制権の返還問題は米軍再編と条件関係にある。つまり、「戦時」作戦統制権が韓国軍に返還されれば、対北朝鮮抑止の中軸は韓国軍となり、米軍はソウル以北から離れ南方に移転する。朴槿恵政権が返還を延期したため、現在ソウル以北には第210砲兵旅団などが残留しているが、かりに「戦時」作戦統制権が韓国軍に返還されれば――過去の米韓合意による限り――米軍は南方に移転する。それは確実に対北抑止力の低下をもたらす。

とりわけ、遠くない将来、北朝鮮がICBMを実戦配備し、米軍の軍事介入を遮断できると判断すれば、その対南武力行使の敷居は下がり烈度は上がる。過去保守政権の下では、北朝鮮の「局地挑発」に対しては「米韓共同局地挑発対備計画」が策定され、そのなかでは上述の米第210砲兵旅団に中枢的役割が与えられていた。この部隊が後方に下がれば、「米韓共同局地挑発対備計画」はその中枢を失い、北朝鮮の対南武力行使を誘発しかねない。

また、「戦時」作戦統制権が韓国軍に返還されることは、日韓間の安保協力に課題を生む。現状の米韓連合軍体制がある限り、韓国が「戦時」に陥った場合、日本はACSAを締結している米軍――およびオーストラリア軍――に後方支援を行い、米軍が「戦時」作戦統制権を掌握する以上、韓国軍に対する支援は米軍を経由する。ところが、「戦時」作戦統制権が韓国軍に返還されれば、韓国軍が独自の統制権をもつことになり、「戦時」に自衛隊は韓国軍と直接の支援関係をもたなければな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李明博政権末期に頓挫して以来、日韓間にはいまだにACSAは締結されていない。

確かに、「戦時」作戦統制権の問題は米韓間の問題であるが、この問題が日韓間の安保協力を伴わなければ、韓国は対北抑止力を落とした上に「戦時」における日韓安保協力に障害を生むことにもかりかねない。

第2セッション 討論3

ファン・ジェホ (韓国外国語大学)

文在寅 (ムン・ジェイン) 政権にとって一番難しい舵取りは、国内よりは国際情勢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というチョ・ヤンヒョン教授の指摘に共感する。現在の北東アジアにおける安保情勢は「強い国」への願望と共に、負けてはいけないという危機感が複雑に絡み合っている。

第2次世界大戦以降に構築された国際秩序は、米国のリーダーシップの下で大西洋と太平洋の両軸で成り立ってきた。一枚岩のように見えた米国主導の秩序の乱れは、意外と外部ではなく内部によるところが大きい。大西洋のブレグジット (欧州連合からのイギリス離脱) と共に米国のもう一つの軸である太平洋においても、現在の秩序が乱れる動きが出てくる。ヒストレグジット (History Exit)、戦後処理の過程において清算しきれずにいる歴史問題が国際秩序の乱れが続く中で再び頭をもたげている。日中間における東シナ海の尖閣諸島の領有権をめぐる対立の他に、中国と一部のASEAN諸国が南シナ海にあるスプラトリー (中国名・南沙) 諸島の領有権を巡り対立しているが、もともとそれは「歴史の負の遺産」と言える。

チャイネグジット (China Exit)、戦後秩序を覆したいという中国の欲求がますます強まっている。これに対して、ジャペグジット (Japan Exit)、日本は「戦列」の再整備と対応を加速している。日本が「失われた20年」で失われたのは経済低迷より国家戦略だった。2010年を機に経済さえも中国に追い越され、プライドを大きく傷つけられた。第2次安倍内閣の発足後から、「勝負しようぜ!」という「侍」としての強い覚悟が感じられる。尖閣諸島の領有権をめぐる対立は、いわば「領土紛争」というより日中間の本格的な競争の始まりと言える。習近平と安倍が政権を握っている間は、中国が域内での主導権を握る前に、日本が巻き返しに出る最後のチャンスと捉えられる。

韓国の以前の政権は日米中3国の中で、二国の関係が悪くても他の二国の関係は良かったが、今回の政権は、日米韓3国とも関係がよくない中でのスタートとなった。トランプ米政権は韓国との関係を全て損得勘定で考えている。慰安婦問題による日韓関係の悪化で在日韓国人の生活に悪影響を及ぼしたように、現在は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配備による中韓関係の悪化で、在中韓国人の生活に悪影響を及ぼすのと重なる。

2015年12月の慰安婦問題日韓合意を再交渉しようとするなら、韓国の対外政策はさらに厳しい局面に直面しかねない。ただ、その方向に進まないようにする要因は多い。文在寅政権発足直後から、北朝鮮の脅威が急浮上し、日韓関係の対立要因は相対的に目立たなくなる。日韓関係の悪化の責任を韓国が負うことになると、トランプ米政権からより強い圧迫を受けることになる。

日本政府の保守化で過去の歴史への前向きな反省を期待するのは難しくなった。心からの謝罪を期待することも難しくなった。心にもない謝罪をいつまでも受けることもできないし、その謝罪さえもさせるのがなかなか難しいのが現実。両国の緊張関係は多少の差こそあれ、一定の責任を共有する。両国関係は歴史的にも文化的にも「愛憎」の関係であるが、チョ教授の指摘通り、日韓の協力関係が北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公共材になるためには、両国が「新型」の日韓関係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

まず、両国関係の「新常態(ニューノーマル)」が求められる。新常態とは一言でいうと「バブル(無駄)」をなくすこと。お互いに過剰な期待を抱くことなく、「実事求是(事実の実証に基づいて、物事の真理を追究すること)」しようということだ。二番目に、両国は自国の国内政治の利益のために相手を利用してはならない。歴史的責任感や政治的感受性を基に、敏感な問題を「賢く」処理すべきである。三番目に、日本流の「韜光養晦(とうこうようかい: 能ある鷹は爪を隠す)」が求められる。日本の捲土重来を図る戦略にはやはり謙遜な気持ちが込められる必要がある。四番目に、新しいパラダイムを共に推進する。先行き不透明な未来の脅威を個別的に乗り越えるか、それとも一緒に克服するか、をまず決めた上で、もしお互いが共感し合えるなら共生の道を共に歩んでいくべきだ。

すなわち、日韓の「愛憎」から「憎」を取り除くために、一緒に努力す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だ。扁鵲(古代中国の名医)が齊の桓公の病気を治す(護疾忌医: 病気を隠し

て医者に見せないこと)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愛憎」の中で「憎」のほうが大きくなると、もはや両国の協力関係は望めないだろう。「愛」のほうが大きくなるよう、両国関係についてより踏み込んだ議論や賢明な決定が欠かせない。

